

희망을 그리는 길, 변화와 인권의 가치를 지향하는 공감 이 함께 합니다.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2007 **연간보고서**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2007 **연간보고서**

프롤로그...4
여는 글...5
공감의 지향...6
공감의 연혁...7

4

희망변론프로젝트 안내...30

9

31

33

58

69

공감이 하는 일

공익단체법률지원 및 연대...10
법률교육 및 법률매뉴얼...12
함께하는 공익소송...15
법제도개선 및 연구조사...21
공익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중개...26

공감의 활동영역

공익법 일반...34
빈곤과 복지...40
여성...44
이주와 난민...49
장애...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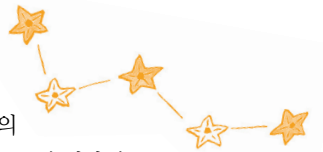
공감이야기

함께 나누고픈 공감 이야기...58
언론을 통해 보는 공감...60

기부자이야기

함께 나누고픈 공감 기부자 이야기...65

2007 공감이 걸어온 길...69
한눈에 보는 공감 살림...83
후원 안내...85
에필로그...86



* 희망을 그리는 길, 변화와 인권의 가치를 지향하는 공감의 함께합니다.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은 국내 최초로, 비영리로 운영되는 공익활동을 본업으로 삼은 공익변호사들의 모임입니다. (The Korean Public Interest Lawyers' Group)

공감은 사회적 약자, 소수자 인권 문제를 중심으로 구체적 인권을 보장하고, 제도적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 사회 인권의 경계를 확장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실천이 '공익법활동'으로 공감대를 만들고 널리 퍼져, '법'을 인권 보장과 사회 변화를 위한 열린 도구로서 기능하게 하는 다양한 흐름이 효과적으로 모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The Korean Public Interest Lawyers' Group 'GONG-GAM'

공감이 태어난 지도 벌써 5년째로 접어들었습니다. 적지 않은 분들의 우려와 관심 속에 조금씩 조금씩 성장하는 과정이었습니다. 2007년만 해도 변호사가 한 명 새롭게 합류했고, 간사 한 명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공감의 활동영역에서 일부 법령의 제·개정이 이루어졌고, 몇몇 의미 있는 소송에서 승소를 하기도 했습니다. 공익단체들에 대한 법률교육 등의 지원활동도 보다 다양하게 확대된 형태가 모색되기도 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회가 변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예전보다 이리이러한 것들은 많이 나아지지 않았냐고, 예전에는 미처 이야기 되지도 않던 인권문제들이 사회적인 공론의 장에서 논의되고 있지 않느냐고, 하지만 공감은 의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인권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지.....

공감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공감이 큰 흔들림 없이 이렇게 오랜 기간(?) 살아남은 것 자체에 대하여 만족해하시기도 하고, 꾸준히 계속 잘 하라고 격려해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공감은 지금의 활동을 해 오던 대로 꾸준히 하는 것만으로 과연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공익과 인권활동을 통한 사회의 변화를 꿈꾸지만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고, 공감이 그러한 변화에 얼마나 기여하였는지 쉽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공감도 결국 변화하지 않는 사회의 한 투영체일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뭔가 그 벽을, 그 한계를 깨야 한다는 쉽게 풀리지 않는 딜레마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법의 지배'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법이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간에 사회적 약자들을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하고 이들의 인권을 충분히 보장해주고 있지 못하다면 그 법을 문제 삼을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 소수자의 문제는 형식적 법의 존재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집단의 인권이 취약하다는 것은 통상 그 집단이 사회구조적으로 구성원들의 권리를 평등하게 보장하고 있지 못함을 의미하고 실질적으로 차별없는 인권보장을 위해서는 별도의 특별한 조치나 보호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들, 특히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의 의식의 변화가 없는 법에 형식적으로 규정된 '만인의 평등'은 공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공감의 법률활동만을 가지고는 진정한 '법의 지배'를 이룰 수 없다는 이야기인데, 법률가집단으로서의 공감은 역설적이게도 진정한 '법의 지배'를 이루기 위하여 스스로의 정체성을 끊임없이 회의하고 이와 갈등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인권은 '자유와 평등을 향한 끝없는 여로'이기 때문에 공감의 활동에도 항상 '만족'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고 결국 끝이 보이지 않은 싸움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공감은 어떤 거대한 변화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사람들의 삶 속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추구하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어려울 수 있는, 그 지향을 계속 가져나가고자 합니다. 항상 스스로를 돌아켜보고 반성하면서.....

5년차 공감,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분들과 공감하고, 많은 일들을 함께하고, 사회의 구석구석까지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008년 2월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올림

어는 글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5살이 된 공감

✦ 소수자 인권보장 및 인권의 경계확장

소수자, 사회적 약자의 구체적 인권을 보장하고, 인권환경에 대한 제도적 개선을 통해 우리사회 인권의 경계를 확장하고자 합니다.

✦ 변화를 지향하는 법적 실천

우리사회의 적극적인 변화가 모색되는 다양한 지점에서 법률전문가로서의 가능한 실천들을 함께하고자 합니다.

✦ 공익법활동의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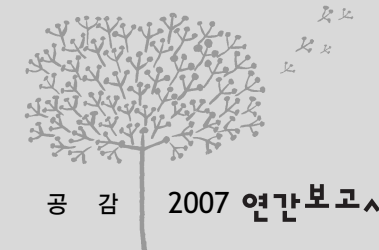
'법'을 인권보장과 사회변화를 위한 열린 도구로 기능하게 하는 실천을 '공익법활동'으로 공유하고 확산시키고자 합니다.



| 공감 연혁 |

연도	날짜	내용
2003	12. 1	염형국 변호사 아름다운재단 근무 시작
	1. 5	정정훈, 소라미, 김영수 변호사 근무 시작
2004	1. 16	'공익변호사그룹 운영을 위한 간담회' 개최
	3. 16~9.17	제1차 '공익단체에 대한 변호사 파견지원사업' 진행(11개 공익단체)
	5. 3	제1호 뉴스레터 발송
	7. 5	사법연수생 전문기관연수, 미 로스쿨학생 인턴연수
	11. 1~4. 30	제2차 '공익단체에 대한 변호사 파견지원사업' 진행(12개 공익단체)
	12. 1	황필규 변호사 근무 시작
2005	3. 1	윤정원 미국 변호사 펠로우 근무 시작
	3. 21~4. 7	장애인단체 활동가를 위한 법률학교 진행
	3. 22	공감 2004 연간 보고서 '공감, 희망을 변론하다' 발간
	3. 22	사법연수생(35기) 변호사 실무수습
	3월	제1기 정기인턴 15인 선발
	5. 6	공감 사무실 이전
	6. 7	제3차 '공익단체에 대한 법률지원사업' 공고
	7. 1	제3차 '공익단체에 대한 법률지원사업' 시작(13개 공익단체)
	8. 1	송성수 펠로우 근무 시작
	8. 15	공감 홈페이지(www.kpil.org) 오픈
2006	10. 4	제2기 정기인턴 10인 선발
	1월	자문위원단 구성(15인)
	2. 22	공감 2주년 기념 후원행사
	2월	제4차 공익단체에 대한 법률지원사업 시작(11개 단체)
	4. 19	37기 사법연수생 160명, 공익변호사기금에 기부약정
	4월	제3기 정기인턴 12인 선발
	5. 19	노인학대 상담원 법률 지원
	6. 1~12. 31	차별에 맞선 소송-이주노동자 차별적 제도·관행에 대한 기획소송
	6. 15	아름다운재단 6월 "처음자리 마음자리"에 공감기부자 초청행사
	6. 16~7. 10	우리는 선의의 파파라치- "차별적 국제결혼광고 반대서명운동" 전개
	6. 30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제1회 공익법포럼 - 공익변호사의 오늘과 내일
	7. 1~8. 12	사법연수생 전문기관·미국 로스쿨학생 인턴연수
7. 11	성·인종차별 국제결혼 광고대응을 위한 인권위 진정서 제출	
7. 20	보험사의 장애아동보험가입 거절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승소	
8월	제5차 공익단체에 대한 법률지원사업 시작(7개 단체)	

연도	날짜	내용
2006	9. 1	김미라 펠로우 근무 시작
	9. 9	일본 오카야마 퍼블릭 법률사무소 개소 2주년 심포지엄 발제
	9월	제4기 정기인턴 14인 선발
	10. 11~10. 30	해외탐방-미국 공익법단체
	10. 15	일본 민단 재외동포법 강의
	10. 21~10. 30	스위스 제네바 UN 인권이사회 참석·민변 반박보고서 제출
	12. 1	한국장애인인권상 정책개선부문 수상
	12. 7	제20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인권상 수상
	12. 30	정정훈 변호사, 제1회 무지개 인권상 수상
2007	1. 11.~8. 20	황필규 변호사-University of Oxford Centre on Migration, Policy & Society 파견근무
	2. 23	장서연 변호사 근무 시작
	3. 20	제5기 정기인턴 12인 선발
	3월	희망변론 프로젝트1-공익단체 법률지원 시작(7개 단체)
	5. 7~5. 9	공익단체 활동가를 위한 법률학교
	5월	〈이주노동자 지원활동가를 위한 법률매뉴얼〉 발간
	6. 7	토론회-지자체의 '농어민국제결혼비용지원사업' 이대로 좋은가
	6. 26	중국 민주당원 난민신청처분취소 소송 승소-중국인 첫 난민인정 판결
	7. 5	법무법인 태평양 공익위원회와 파트너십 체결
	7. 5~7. 12	공공장소 노숙인 폭력피해 실태조사
	7. 18~8. 10	비닐하우스촌 거주민 법률상담 및 문패달기
	7. 26~8. 3	뉴욕 UN여성차별철폐협약 회의 참석-NGO의 반박보고서 제출
	9. 14	제6기 정기인턴 23인 선발
	9. 28	필리핀 가톨릭추기경으로부터 감사패 받음
	10. 23~11. 22	이주노동자 지원단체 활동가를 위한 권역별 법률교육
12. 13	공익제보자외함께하는모임으로부터 감사패 받음	
12. 26	비닐하우스촌 수정마을 전입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 소송 승소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2007 연간보고서

»공감이 하는 일

공익단체법률지원 및 연대
 단체활동가 및 법률매뉴얼
 함께하는 공익소송
 법제도개선 및 연구조사
 공익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중개

공감이 함께한 단체

공익단체법률지원

공감은 소수자·사회적 약자의 인권옹호와 권익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단체의 활동을 법적·제도적 측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7년에는 정기공모를 통해 선정된 단체에 담당변호사를 지정하여 단체 기획사업에 대한 법률자문, 법·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조사 등 관련 사업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2008년부터는 공익단체와 더 가까이 호흡하고자 연중 수시로 단체로부터 사업 제안을 받아 공익단체에 대한 법률지원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공익단체법률지원〉신청과 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30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연대활동

공감은 공익단체법률지원 사업 이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 인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2007년에는 특히 ‘차별금지법의 올바른 제정을 위한 반차별 공동행동’에 ‘여수화재참사 공동 대책위원회’,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대응 공동행동’,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연대’ 등의 연대활동에 참여하여 여러 단체들과 함께 관련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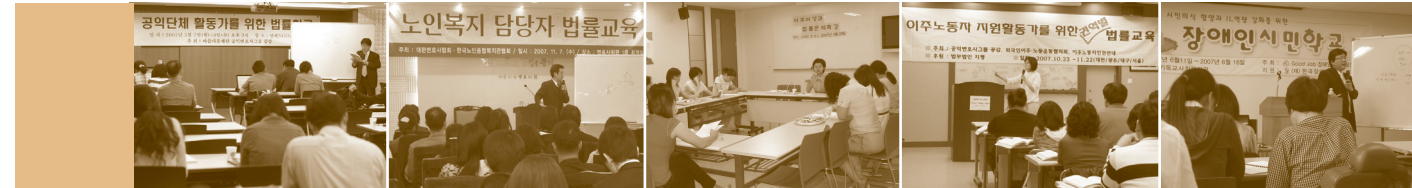
2007년 공감이 함께한 단체

영역	단체명	사업
공익법 일반	공익제보자와 함께하는 모임	공익제보자 법률자문, 소송 지원
	함께하는 시민행동	주민소송 법률지원단 활동
	차별금지법의 올바른 제정을 위한 반차별공동행동	법 제정 활동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대응 공동행동	법 개정 활동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법 제정 활동
	군대 내 동성애자 병사 인권침해 대응 대책위	법률자문
	유엔 보편적 정례검토 NGO대응모임 / 유엔 사회권위원회 NGO대응모임	NGO보고서 작성
빈곤과 복지	다양한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 해소와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연구모임	토론회 개최 등 연구 활동
	노숙인 다시서기 지원센터	노숙인 인권침해 사례 실태조사
	노숙인 인권과 복지를 실천하는 사람들	파산학교 법률교육 지원
여성	주거권실현을위한주민연합	비닐하우스촌 주민의 전입신고수리 거부처분취소소송 비닐하우스촌 인턴 및 사법연수생 법률봉사활동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법률자문 및 아동학대 사례개입을 위한 법률매뉴얼 제작
	광주성매매피해상담소 언니네	선불금 무효 및 업주 고소건, 청소년 피해자 입건 문제 등 자문
이주와 난민	장애여성공감	장애여성 활동가 법률세미나 지원 및 법률자문
	인천여성성의전화	결혼이주여성 소송지원
	천주교이주노동자사목회 필리핀 공동체	필리핀 이주여성에 대한 소송지원
장애인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법제 개선 운동 및 소송지원
	여수화재참사 공동대책위원회	피해자 보상지원 및 법률자문
	굿잡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장애인자립생활지원사업과정상의 법률문제 자문, 장애인 재활법 제정 지원
	성동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 준비
	김해장애인부모회	장애인가족지원조례 제정작업
	지적장애인복지협회	지적장애인특별법 제정 작업
성년후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활동 및 해설서 작업,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작업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활동 및 해설서 작업,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작업
	성년후견추진연대	성년후견 입법추진활동, 일본 성년후견연수, 연수 보고회, 성년후견토론회 지원활동

법률교육 및 법률매뉴얼

공감은 법률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수자·사회적 약자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원하고 있는 공익단체 활동가들의 법률 전문성을 강화하여 각 단체에서 진행하는 법률관련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법률교육을 진행하고, 법률매뉴얼을 만들어 필요한 단체에 보급해오고 있습니다.

* <법률교육 및 법률매뉴얼>사업 신청과 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30페이지를 참고하세요.



2007년 찾아가는 법률교육

[공익법일반]

날짜	주관단체명	교육제목
8. 22	부천시민연합	시민강좌 '직접참여제도의 의의와 추진방향 (주민소환제를 중심으로)'
9. 19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활동가 교육 'NGO와 법의 지배 - 공익소송의 실제'
9. 22	대구 에이즈예방협회	공무원 양성교육 강의
10. 29	대한에이즈예방협회	감염인 활동가 강의
10. 4, 11, 8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 '국제인권법 특강'

[빈곤과 복지]

날짜	주관단체명	교육제목
3. 28	내일청소년상담소	형사절차상의 소년법리뷰
4. 12~	노숙인복지와인권을실천하는사람들	파산학교 법률교육 (7회)
7. 6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상담원 대상 '아동학대 사례 개입을 위한 법률문제'
7. 20	영등포노인종합복지관	'노인에 대한 재산적 학대'
11. 7	대한변호사협회	전국 노인복지관 상담원 법률교육 '노인학대의 형사문제'
11. 28	송파노인복지관	송파노인복지관 법률교육 '유산, 상속에 관한 법률문제'
12. 22	내일청소년상담소	성폭력가해자 교육프로그램 '청소년인권과 성폭력관련법률'

[여성]

날짜	주관단체명	교육제목
4. 30, 10.22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중구센터	가정폭력 상담원 대상 이주여성관련 법률 교육
5. 16, 5. 29	안산시청	필리핀, 베트남, 러시아 여성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법률교육
6. 20	이주여성 1366	몽골, 중국, 러시아, 필리핀, 베트남 상담원 대상 법률교육
8. 14	결혼이민가족지원연대	여성결혼이민자 관련 활동가 법률교육(옥천)
9. 19	유엔인권정책센터	국제결혼 캠페인-베트남 현지 공무원 및 상담원 대상 한국법을 강연
9. 28	이화여대 한국근현대사연구회	결혼이주여성의 인권실태 및 법적 쟁점 강연
10. 2	사법연수원 제38기 법여성학회, 인권법학회 공동	결혼이주여성의 인권실태 및 법적 쟁점 강연
10. 17	여성가족재단	이주여성 폭력 관련 법률강의
10. 29, 11. 1	검찰청	성폭력 전담검사 교육 '장애여성에 대한 성폭력'

[이주와 난민]

날짜	주관단체명	교육제목
3. 8	안산시청	이주자 지원단체 활동가를 위한 법률교육
10. 9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난민 특강
10. 17	법무부	출입국 관련 직무교육
12. 28	이주노동	이주노동 농성장 '단속' 관련 교육

함께하는 공익소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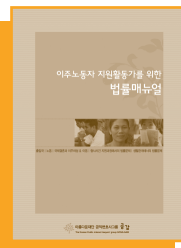
[장애]

날짜	주관단체명	교육제목
3. 27	지역사회정신보건자원봉사단	정신보건법의 문제
4. 9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정신보건 현황과 개선방안
6. 15	굿잡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시민학교 '자립생활조례제정의 필요성 및 실천전략'
6. 22	원주장애인복지관	장애인차별금지법 교육
7. 4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법률상담 연수생 교육
9. 5	서울여성장애인연합	여성장애인 성폭력 상담원 양성 교육
11. 29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우대학 열린강좌 '지적장애인특별법 제정 방향'
12. 3	국가인권위원회	상담센터 직원 법률교육 '정신보건법의 제문제'

2007년 법률교육 기획사업(주최:공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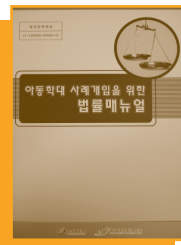
후원	날짜	교육제목
	5. 7~5. 9	공익단체활동가를 위한 법률교육
법무법인 지평	10. 23~24	이주자 지원활동가를 위한 권역별 법률교육 - 대전
	10. 31~11. 1	이주자 지원활동가를 위한 권역별 법률교육 - 광주
	11. 6~7	이주자 지원활동가를 위한 권역별 법률교육 - 대구
	11. 21~22	이주자 지원활동가를 위한 권역별 법률교육 - 서울

2007년 법률매뉴얼 발간



〈이주노동자 지원 위한 법률매뉴얼〉 발간

공감은 외국인 이주 노동운동협의회와 공동 기획하고 법무법인 지평의 지원을 받아 '이주노동자 지원 활동가를 위한 법률매뉴얼'을 발간했습니다. 매뉴얼에는 출입국, 국제결혼과 이주여성, 각종 형사사건 등 이주노동자를 지원하는 활동가들이 쉽게 찾아보고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아동학대 사례 개입을 위한 법률매뉴얼〉 발간

공감과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공동으로 기획하여 국내 최초로 '아동학대 사례개입을 위한 법률매뉴얼'을 발간하였습니다. 매뉴얼은 아동복지법 및 관계 법령을 통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지위와 역할 및 아동보호와 관련한 법적 기준들을 의미 있게 해석함으로써 특히 법적 개입이 필요한 아동 학대 사건에 대한 길잡이 역할을 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공감은 이주노동자·난민·장애인·아동·여성·성소수자 등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반복적인 인권침해 및 차별적 관행, 우리 사회의 공익에 반하는 불합리한 제도와 이로 인한 피해에 대해 법률자문·소송대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함께하는 공익소송'이라는 상시적인 접수창구를 마련해 지원대상과 영역을 확대하였습니다.

인권침해 폭로 중국인 최초 난민인정

한국에서 난민으로 인정받기는 정말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주로 아시아, 아프리카에서 내전과 탄압에 시달리다 힘들게 찾은 대한민국에서 그들은 난민인정도 받지 못하고 더욱 힘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공감은 이들이 난민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소송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공감은 지난 2007년 5월, 중국 정부 관리의 사형수 장기매매 등 인권침해 실태를 국제사회에 폭로하는 데 공헌한 중국인 A씨와 그 가족을 대리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중국의 인권침해 사례가 세계에 폭로되는 데 기여했고, 중국이 이에 대해 체포·구금 등 탄압을 계속해 오고 있는 점 등에 비춰 강제송환시 중국 정부의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주소지가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

주소지 등재가 이뤄지지 않은 채 살아야 한다면 그 생활은 어떠할까? 생활에 꼭 필요한 전기·상수도 등 기반 시설의 공급이 불안정하거나 비정상적인 방법을 통해 이뤄질 수밖에 없고, 자녀들은 인근에 학교가 있는데도 학교배정을 받지 못해 먼 거리에 있는 학교를 통학해야 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복지정책에서도 소외되거나 차별받을 수 있으며, 위장전입을 할 수 밖에 없는 등 주민들의 불편과 경제생활의 불이익은 매우 심각한 것이 현실입니다. 행정기관은 비닐하우스촌에 거주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비닐하우스촌을 사람이 거주하는 주택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그에 따라 주민등록 등재를 계속 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12월 26일, 공감이 000씨의 주민등록전입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소송의 소송대리를 맡아 서울시 강남구 포이제4동장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공감은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행정법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 “원고 000씨가 5년 이상 이 사건 거주지에서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이상, 행정기관은 주민등록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원고의 전입신고를 수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이 지역이 불법 무허가 집단 지역이라는 사유를 들어 이를 거부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행정기관의 주민등록전입신고수리거부처분은 위법하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용기있는 선택 - 공익제보자

공감은 우리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에 맞서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 공익제보자들에게 힘이 되어주기 위해 법률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와 하청업체 사이의 납품 비리 의혹을 사내 감사팀에 고발해 대기발령을 받는 등 인사상 불이익과 ‘왕따’ 당했던 A씨, 2005년 회사의 국가지원예산 유용을 폭로했다가 기밀유출과 회사비방 등의 이유로 해고된 B씨, 식약청에 가짜 중국산(産) 참기름 판매업체를 제보했다가 낭패를 당한 C씨 등 비리를 고발했다는 이유로 억울한 처지에 놓이게 된 공익제보자에게 친구가 되어 이들이 용기있게 선택한 길을 함께 가고자 합니다.

* (함께하는 공익소송)신청과 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30페이지를 참고하세요.

2007년 주요소송

공익법 일반

- HIV 감염인 출국명령 취소소송
- 지방의회 의장·부의장 업무추진비 남용 및 지방의회 의원 관광성 해외여행에 대한 주민소송 및 항소
-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 남용에 대한 주민소송
- 지방자치단체장·부단체장 업무추진비 남용 및 위법한 인공폭포 조성사업으로 인한 예산낭비에 대한 주민소송
- 지방자치단체 음식물쓰레기처리장 설치예산 낭비에 대한 주민소송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수령으로 인한 예산 낭비에 대한 주민감사청구 및 주민소송
- 부천시 주민감사청구
- 학교용지부담금 관련 감사원 감사 신청
- 순천시 민간인 여비 부당지원에 관한 고발
- 공익제보(재단의 비리, 학교운영자의 여학생 성추행 비리 고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기소유예처분 취소 헌법소원
- 공익제보자(중국산 가짜참기름 유통 비리 고발)를 위한 손해배상청구
- 공익제보자(회사내 비리 내부신고)에 대한 무고 등 혐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공익제보자(회사내 비리 내부신고)에 대한 회사의 부당처우에 대하여 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해고무효확인소송
- 공익제보자(KTX 사업 과정에서의 예산낭비 국가청렴위 신고)에 대한 정보통신망법 적용 사건에 대한 민사사건 대리
- 위장납북어민 보상거부처분취소소송 중개
- 국가유공자 유족 비해당결정취소 행정심판 중개
- 대법원의 재판지연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
- 국기에 대한 경례거부 교사에 대한 징직처분 취소소송
- 전보발령 거부로 인한 해고무효확인 소송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조 정의규정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 필리핀 소재 한국기업의 노동3권탄압 관련, OECD 가이드라인 국내연락사무소에 진정서 제출
- 한국기업의 버마가스개발사업과 관련, 하버드대학교 인권클리닉과 공동으로 국가인권위 진정 협의

빈곤과 복지

비닐하우스촌 주소지전입신고 수리거부처분 취소소송
의료급여법시행령 본인부담금 부과에 대한 헌법소원

여성

가정폭력 피해 중국 여성 가사소송 지원
사망 배우자의 자(子)가 제기한 혼인무효소송에 대한 중국 여성의 추완항소 지원
대리모로 이용당한 베트남 여성의 손해배상청구 및 양육자지정변경신청 소송지원
성매매피해 필리핀여성 3인의 업주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항소심 지원
필리핀 여성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변경 청구
필리핀 여성 정신장애 불고지 남편 상대 이혼소송
평택 새움터 성매매피해여성 채무부존재,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이주와 난민

버마 난민인정불허결정처분취소소송 및 항소심
버마 8인 난민불허결정처분 취소소송
중국인에 대한 난민불허결정처분 취소소송
법무부 난민지침에 대한 정보공개불허처분 취소소송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업주의 폭행 및 경찰공무원의 강제연행 손해배상청구소송
여수보호호사망사건 집회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적용 사건 형사변론
이주노조 관련 국제노동기구 ILO 진정 자문
고용허가제의 사업장 변경 3회 제한에 대한 헌법소원
중소기업중앙회의 산업연수생 관리 의무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산업연수생 퇴직금청구소송

장애

청계천 접근권 차별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소송
시설 운영자에 의한 입소 정신지체 장애여성에 대한 성폭력 사건 손해배상소송
공직선거법상 청각장애인 차별조항 헌법소원
청각장애여성 성폭력피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장 작성
장애인시설(복지재단) 비리고발 및 제도개선 요구중 기소된 농성장애인과 인권활동가들을 위한 형사변론
장애인시설(복지재단) 비리고발 및 제도개선을 요구한 장애인공동투쟁단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청구에서 피고를 대리

**“한국음식 강요당한 이주노동자에 배상하라”
법원 “수술받은 파키스탄인 이직지연은 중기중앙회 등 책임” 판결도**

[한겨레 2007-06-28] 하어영 기자

파키스탄인 ㄱ(28)씨 등 5명은 2005년 9월 한국에 산업연수생으로 들어오며 “연수 기간에 한국 음식을 먹겠다”는 각서를 써야 했다. 이주노동자가 업체에서 제공하는 한국 음식을 먹지 못할 경우 업체가 식대를 따로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들이 배정받은 ㄷ산업은 한국 음식만 줬다. 건디다 못한 ㄱ씨 등은 한 달 뒤 “파키스탄에서는 종교적인 이유로 먹을 수 없는 돼지고기를 포함해 문화적으로도 먹기 힘든 한국 음식만 먹을 수는 없으니 식대를 따로 달라”고 회사 쪽에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ㄱ씨 등은 “다른 회사로 옮겨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연수 추천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는 근무처를 바꿔주지 않았고, 오히려 같은 해 11월 이들을 출국조처했다. 인력 송출업체가 탑승권을 준비하지 못해 며칠 국내에 머물던 이들은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 를 찾았다. ㄱ씨 등은 인권센터의 도움으로 출국이 취소됐고, 일자리를 옮길 수 있었다.

다른 업체로 가기까지는 짧게는 두 달, 길게는 넉 달이 걸렸다. 이 기간에는 법령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가 숙식비 등을 줘야 하지만, 중소기업중앙회는 이조차 주지 않았다. ㄱ씨 등은 지난해 1월 중소기업중앙회와 파키스탄 인력송출업체 ㄴ사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8단독 정원 판사는 “입국 전에 한국 음식을 먹겠다는 취지로 서약을 했다고 할지라도, 종교적·문화적 차이로 연수업체가 주는 음식을 도저히 먹을 수 없는데도 이를 계속 강요하는 것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며 “ㄱ씨 등 5명에게 3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파키스탄인 ㄷ(28)씨가 “허리를 다쳤는데 오히려 허리에 많은 부담을 줄 수 있는 연수업체로 배정해 질병을 악화시켰고, 7개월 동안 새 근무처를 배정하지도 않은 채 숙식비도 주지 않았다”며 중소기업중앙회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종략)

이번 판결은 산업연수생이 중소기업중앙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손해배상을 인정받은 첫 사례다. 산업연수를 하는 이주노동자들이 질병이나 열악한 노동조건, 종교적 이유 등으로 연수업체를 바꿔달라고 요구했는데도 적절히 조치하지 않은 데 대한 책임을 묻은 것이다.

정정훈 변호사는 “산업연수생 제도는 없어졌지만, 이 판결은 현재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적용되고 있는 고용허가제의 ‘2개월 안 적절한 업체 배정’ 문제와 관련지어 볼 때 적지 않은 의미를 지닌다”고 말했다.

법제도개선 및 연구조사

공감은 소수자,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장과 공익법활동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정책에 대하여 조사 및 연구를 진행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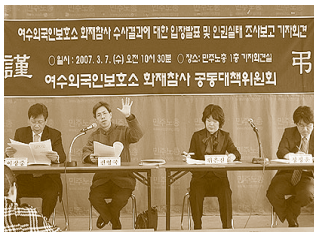
인권침해적 농촌총각 국제결혼자원사업 감사청구



농어민 국제결혼비용 지원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결혼 비용 지원의 명목으로 국제결혼 중개업체에 대한 수수료 수백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심지어 이와 같은 사업을 '조례'로 제정하여 명문화하고 있기까지 합니다. 단지 양적으로 접근하는 이러한 국제결혼중매사업은 상대국이 불법으로 규정하는 국제결혼을 조장한다는 점, 한국에 들어와 어려움을 겪는 이주여성들에 대한 정책이 없다는 점 등 여러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공감은 이주여성정책네트워크를 통하여 토론회, 법적대응 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공감은 963명의 청구인을 대리하여 7월 26일, 지방자치단체의 '농어촌 총각 장가보내기(국제결혼)사업'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농어촌 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은 농어촌 지역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동아시아 여성으로 대체함으로써 임시방편적으로 해결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그 목적이 부적절하며,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인신매매적인 중개행태를 방조하는 데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것이 감사청구의 주 내용이었습니다.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 실태조사



2007년 2월, 여수외국인보호소에서 발생한 화재사건으로 10여명의 무고한 생명이 최장살에 갇힌 채 속수무책으로 죽어갔습니다. '보호소'라는 명칭 하에 운영되는 구금시설에서 한국의 꿈에 갇혀 '불법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떠난 희생자들. 죽음에 대한 배상은 있었지만, 아직 죽음의 의미를 되살려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보호 없는 곳을 '보호소'라고 부르고, 그 공간은 '외딴 섬'처럼 우리의 인식 바깥에서 적법절차의 통제를 쉽게 비켜갑니다.

공감은 미등록외국인 단속 및 보호 과정에서 일어나는 인권 침해 문제를 여러 관련 단체들과 함께 제기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익법일반]

분류	제목	주관단체명
토론회	한국형 인신보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_토론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건설현장의 노-노 갈등 간담회_발제	대구성서공단노조
	차별금지법의 올바른 제정을 위한 토론회/공청회_발제	반차별공동행동
	세미나 '사형, 그 유예를 넘어'_발표	천주교 주교회의 정평위
	주민소환 토론회 '주민소환제도의 의의'	광주참여자치 21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통제방안'_토론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실
	2007 한국인권보고대회 '사법개혁 현황과 과제'_발제	인권단체연석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변 '로스쿨 간담회'_발제/연세대 '로스쿨 발전방향'_토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연세대
	'모두를 위한 에이즈예방, 어떻게 가능한가?' 토론회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공동행동
	법률 간담회_발제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공동행동
	'성전환자 성별 변경에 관한 성전환자 증언 및 전문가 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 유럽사회현장 세미나 패널 토론	국가인권위원회
	워크숍 '유엔인권기구의 한국에 대한 권고'_발표	유엔 보편적 정례검토 NGO 대응모임
	인권옹호와 기업 워크숍 '슈에가스프로젝트 : 새로운 단계'_발표	호주 뉴사우스웨일즈대학교 외교연수프로그램(DTP)
해외한국기업 워크숍 토론	사회운동포럼	
연구/조사	문화관광부의 예술인회관 건립사업 전면 재검토 촉구 기자회견 및 공대위 의견서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자문의견서 제출	국가청렴위원회
	제주도 해군기지 여론조사 시행 관련 의견서 작성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민원 자문 의견서 작성-산재보험금 환수 관련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성림재단 기부채납 관련 의견서 작성	성공회 유지재단
	고양시 노점상 단속 관련 의견서 작성	전국노점상연합회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정부 개정안 의견서	국가인권위원회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공동행동 개정안 해설서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대응 공동행동
	유엔인권이사회(HRC) 참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변 인종차별철폐협약 반박보고서 작성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한국기업 버마 무기수출 판결선고 기자회견	버마민주화 긴급행동
필리핀 소재 한국기업 노동3권탄압과 관련, 필리핀 현지조사	국제민주연대, 민주노총	
선원법상의 에이즈 검진규정에 관한 자문	국가인권위원회	

[빈곤과 복지]

분류	제목	주관단체명
토론	'학원교습시간제한과 청소년의 인권' 토론	한국YMCA전국연맹
연구/조사	강남·서초·송파구 소재 비닐하우스촌에 대한 실태조사 및 법률상담	주거권실험을위한주민연합공동
	국가인권위원회 2007 안양소년원, 광주소년원 방문조사 참여 및 관련 보고서 작성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부랑인시설 방문조사 참여	국가인권위원회
	000 교사 전교조 재심위원회 제출 의견서	
	노숙인 폭력피해 실태조사	다시서기상담보호센터 공동

[여성]

분류	제목	주관단체명
토론회	국제결혼중개 규제 활동 '국제결혼중개 규제 법안 마련을 위한 입법 공청회' 토론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
	'지방자치단체의 농어민 국제결혼 비용지원 사업,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 기획	이주여성정책네트워크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토론	여성가족부
	충북지역 '농어민 국제결혼 비용지원 사업 반대 토론회' 토론	
	지방자치단체 농어민 국제결혼 비용지원 사업 관련 토론회 발제	광주여성전화
	베트남 국제결혼 이주여성 프로젝트 설명회 발제	유엔인권정책센터
	한국여성연구원 30주년 기념 심포지움 결혼이주 인권실태 발표	한국여성연구원
	이주여성의 현황 및 법적 지위에 관한 세미나 발제	서울지방변호사회
	국제결혼이주여성 국제컨퍼런스 발제	서울대학교 여성연구소
	2007 한국인권보고대회 국제결혼이주여성 인권실태 관련 발표	인권단체연석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연구/조사	한국가족법학회 동계학술대회 '베트남의 가족법 및 국제결혼 관련 법제에 대하여' 토론	한국가족법학회
	대만의 이주여성 자조조직 그룹 형성에 대한 강연 기획	이주여성인권포럼
	연예유희비자를 통한 이주여성 유입 시스템 실태조사	문화관광부
	여성차별철폐협약 반박보고서 작성	민변 여성위원회
	성폭력특별법 8조 항거불능에 대한 판례비평 작성	성폭력상담소
	UN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제39차 뉴욕회의 NGO 대표단 참석	UN여성차별철폐위원회, 민변 여성위원회



[이주와 난민]

분류	제목	주관단체명
토론회	'여수 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 공동대책위 평가와 과제' 토론/미등록이주노동자 합법화 토론회	여수 화재참사 공동대책위원회
	미등록이주민 단속토론회 '출입국과 경찰' 발표	국가인권위원회
	워크숍 '한국의 미등록이주민과 국제인권' 발표	미등록이주민에 관한 국제협력네트워크(PICUM) & 국제이주민권리(MRI)
	'국제법체계에서 이주민의 가족결합권에 대한 기본접근방법의 재구성' 발표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이주정책연구소 (COMPAS)
	'유엔 이주권리협약 비준을 위한 시민운동의 과제' 토론	한국사회포럼
	다함께 동부포럼 '우리는 왜 이주노동자를 환영하여야 하는가' 발표	다함께
연구/조사	2007한국인권보고대회 '한국의 이주민과 국제인권' 및 이주분야 총괄 발표	인권단체연석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한국내 난민의 보호' 발표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인권소위
	국가인권위원회 보호소이송 자문의견서	
	여수화재 사건 국가인권위 직권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서	여수 화재참사 공동대책위원회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영원안, 법무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 대한 의견서	인권단체연석회의
	경찰의 불법체류자 단속 관련 의견	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사법경찰관의 강제연행에 대한 자문의견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외국인보호소 실태조사 참여 및 관련 보고서 작성	국가인권위원회
	출입국 단속 보호 등 인권친화적 제도 개선 연구(법무부 용역) TFT	대한변협 이주외국인인권소위
	국내법원의 난민관련 판례 동향 작성	UNHCR 난민변호사 네트워크
연구/조사	유엔인권이사회 민변 서면진술서 '한국내의 이주민의 권리' 제출 (제네바, 스위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강제이주 여름학교 참가 (옥스퍼드, 영국)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난민연구소(RSC)

[장애]

분류	제목	주관단체명
토론회	일본 성년후견 관련기관 방문연수 및 보고회 토론	성년후견추진연대
	'성년후견제 도입방안' 토론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신장애인 인권개선활동 '정신장애인 인권현황과 개선방안' 토론	법과사회이론학회
	'장애인거주시설 서비스 혁신방안 공청회' 토론	성공회대 사회복지연구소
연구/조사	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	성동자립생활지원센터
	'성동구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의 법률적 검토' 토론회 발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가이드라인 작업/해설서 사법행정 부분 작성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장애인차별실태 분석 및 유형화에 관한 연구	양극화·민생대책위원회
	장추련 인권위법개정 관련 의견서 작성	

‘무삭제’ 차별금지법 만든다 – 인권단체, 별도 법안 준비중

[여성주의 저널 일다 2007-12-11] 김영선 기자

인권시민단체들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정부안으로 확정된 차별금지법안과 겨룰 새로운 법안을 준비 중이다.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한국성폭력상담소, 인권운동사랑방 등 인권시민단체들은 ‘차별금지법의 올바른 제정을 위한 반차별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을 결성해, “차별피해자의 평등권을 실현하고 실질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대안적인 차별금지법안을 준비해왔다. 공동행동은 10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토론회를 열어 법안을 공개했다.

정부안에서 삭제된 7개 차별 사유 복원

시민사회에서 마련 중인 차별금지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정부안이 제외한 7개 차별사유를 복원시킨 것이다. 법무부는 차별사유 삭제에 대해 ‘외국입법례 등과 비교해 차별사유가 망라되어 있기 때문에 법안을 수정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장서연 변호사는 ‘대표적’ 차별금지사유를 선정하려는 법무부의 기준은 오히려 “우리 사회 차별의 심각성 및 국제인권기준에서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반박했다. 가령 호주, 캐나다, 아일랜드, 뉴질랜드의 입법례 경향 및 UN인권위원회의 해석에 따르면 ‘성적지향’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 더욱이 장 변호사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이미 정비되어 있거나 차별 관련 판례가 축적되어 있는 외국입법례와 단순 비교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공동행동에서 마련 중인 차별금지법안에서는 차별금지사유 7개 항목을 복원시키는 한편, 정부안이 ‘성별’, ‘장애’ 등의 정의 규정을 삭제한 것도 복원시켰다.

또한 중요하게 다뤄진 것이 차별구제 수단의 실효성 부분이다. 예를 들어 한국철도공사의 KTX여승무원 고용차별의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는 성별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이므로 고용구조를 개선하라는 권고를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인권위의 권고에는 강제력이 없어, 실제 차별행위의 시정을 기대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차별구제 수단이 실효성을 가져야 한다는 게 공동행동의 입장이다. 정부안은 시정명령,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도입하지 않고 법원의 구제조치만을 규정하고 있어, 효과를 갖기 어렵다는 것.

징벌적 손해배상 등 차별구제 실효성 확보

장서연 변호사는 “차별의 피해자는 약자, 소수자”라며 “차별피해자와 차별가해자 지위의 불평등을 간과한 채, 차별피해자가 소송으로 차별가해자와 대등한 위치에서 분쟁 해결을 하도록 한 정부안은 실효성이 없는 장식적인 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차별시정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가 시정명령권을 갖지 못한다면, 차별가해자가 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무시했을 때는 피해자가 직접 소송을 해야 한다. 그러나 시정명령이 이루어진다면 피해자가 아닌, 그 명령에 불복하려는 차별가해자가 직접 소송을 통해 시정명령을 무효화해야 한다. 즉 시정명령을 통해 피해자에게 부담을 전가시키지 않을 수 있고, 차별구제가 실효성을 떨 수 있다는 것이다.

공동행동은 징벌적 손해배상 역시 차별을 억제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장서연 변호사는 “현재 한국의 손해배상은 차별시정의 효과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장 변호사는 “차별로 인한 손해를 입증하기 어렵고 손해배상이 소액에 그쳐, 현실적으로 차별 받는 피해자가 소송하겠다는 의지를 꺾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심지어 가해자는 패소하더라도 차별금지법을 위반하는 것이 금전적으로 이득이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공동행동은 마련 중인 차별금지법안에 시정명령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강화했다. 인권위의 시정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게 했고, 악의적 차별에 대해서는 손해액의 2배에서 5배까지 배상금을 물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했다. 공동행동은 현재 마련 중인 차별금지법안은 1월 의원발의를 거쳐, 2월 임시국회에서 정부안과 겨룰 계획이다.

공익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중개

공감은 변호사, 전문가, 대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익활동 프로그램을 개발·중개하고, 공익단체와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공익법활동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2007 주요 공익활동 중개

- 법무법인 충청과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협약 중개
- 법무법인 지평 이주노동자활동가 법률매뉴얼 작업 및 법률교육에 재정 지원, 교육 참여
- 법무법인 태평양 파트너십 체결 및 공익활동중개
- 세계한인변호사회(IAKL) 총회 '한국로펌의 공익활동' 발표
- 정기/수시/특별 공감인턴십 운영
- 제1회 공감 인권법 캠프 개최 (법무법인 한결 후원)

[법무법인 충청과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협약 중개]

공감은 그 동안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소송지원과 법률자문 등의 활동을 진행해 왔는데, 이 활동을 법무법인 충청에 연계해 변호사와 공익단체간에 파트너십 체결을 중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충청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법률지원을 통해 공익활동에 적극 동참키로 했습니다.



[법무법인 태평양, 공감활동 지원 및 공익활동 프로그램 운영]

법무법인 태평양은 공감 변호사 1인의 활동비 지원 및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내용으로 공감과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공감과 태평양은 이번 파트너십을 계기로 함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공익사건에 대해 적극적인 협력 시스템을 갖추게 됩니다.



[제1회 공감 인권법 캠프 개최 -법무법인 한결 후원]

공감은 일반인들의 인권 의식을 향상시키고 인권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고양하고자 제1회 인권법캠프를 진행하였습니다. 인권에 관심있는 대학생 및 일반인 40명이 참가한 이번 캠프에서 참가자들은 여러 부문의 인권법 활동에 대해 배우고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캠프 내용은 인권과 법, 인권의 정의 및 역사, 그리고 이



주자/여성/성소수자/장애인/공익제보자/북한인권 등 각 영역별 강좌와 인권참여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공감 소속 변호사와 인권단체 활동가 및 학계 전문가가 강사로 참여하였습니다.



[공감 인턴 프로그램]

개념

정기인턴 | 정기적으로 모집되어 일정 기간 동안 공감 구성원들과 함께
공감의 기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자원활동가

수시인턴 | 수시로 모집되어 협의된 기간 동안 협의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원활동가

특별인턴 | 외부 의뢰 또는 외부 프로그램(사법연수원 변호사실무수습, 전문기관연수, 직장체험프로그램,
개별대학프로그램 등)에 의하여 모집되어 그 의뢰 또는 프로그램에 의거한 기간 동안
업무를 수행하는 자원활동가

활동분야

법률연구조사 | 소송 지원, 실태조사, 법률 매뉴얼 작업 관련 업무보조 / 문헌 리서치 등

통·번역리서치 | 국내외문헌 통·번역 리서치 등

모금기획 | 모금 관련 리서치 및 제안서 작성 / 모금행사 기획 및 운영 / 기부자관리 운영업무 등

홍보기획 | 공감뉴스레터 취재 기획 및 실행 / 홍보웹사이트 운영 기획 및 관리 / 다양한 홍보방안 연구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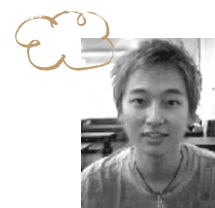
정기인턴 활동기간

상반기 | 3월 ~ 8월 (6개월간 200시간 이상)

하반기 | 9월 ~ 2월 (6개월간 200시간 이상)

- 학기중 (9~12월) 120시간 : 주2회 10시간 이상 근무

- 방학중 (1~2월) 120시간 : 주3회 15시간 이상 근무



공감의 인턴 활동을 통해서 제가 보고 배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변호사님들과 간사님들의 열정입니다. 회의실조차 따로 없는 비좁은 사무실에서 더위와 싸워가며 공익소송을 준비하시고, 산더미같이 쌓인 소송서류들을 검토하시느라 밤새는 것도 마다하지 않으시며, 소외된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직접 현장에 나가 발로 뛰시는 모습들은 가슴 속에서 우리나라의 열정 없이는 불가능한 일들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열정이 세상의 어두운 곳을 하나하나 비추어 가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공감의 공이 공(空)이 아닌 공(共)임을 마음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공감의 활동이 그야말로 속이 꽉 찬 '세상에 이바지하는 일'이라는 것만큼 저의 얼마 안 되는 기부를 의미 있게 해주는 것이 또 있을까요? 공감의 이러한 열정과 활동이 영원히 계속되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열정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함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 서범욱 5기 인턴



인권보호 분야에서 전혀 특별하지 않은 저같은 사람까지도 소박한 마음을 내어놓게 만드는 힘, 그것이 바로 이 '공감'의 힘이 아닐까요. 우리 안에 잠들어 있는 대의(大義)를 향한 열정을 깨워주는 힘 말이지요. 이주노동자, 장애인, 아동, 여성, 난민 등 사회 곳곳의 그늘진 곳에서 그분들의 상처에 연고를 찾아 발라주고는 내 상처가 치유되었다 여기고 기뻐하는 곳. 그 상처를 준 것은 결국 우리라며 미안해하고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곳.

우리같은 사람들은 그저 함께 느끼는 것만으로도 같이 가고 있는 것이라는 용기를 주는 곳. 그래서 이렇게 좋은 사람들 옆에 있다 보면 저같은 사람도 웬지 좋은 사람인 것 같은 기분이 드는..... 봄을 향한 열차를 이끌어 가는 바로 이분들의 힘 말이지요.....

이렇게도 '좋은 사람'은 우리 사회의 공공재(公共財?)이므로 공유(共有?)해야 한다고 평소 생각해 왔습니다. 그저 이런 분들이 계시다는 것이 좀 더 많이 알려져서 필요한 분들께 위안과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입니다. 공감에서 일하시는 분들과 또 함께 하고 계신 분들이 제겐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 함영선 6기 인턴



희망변론프로젝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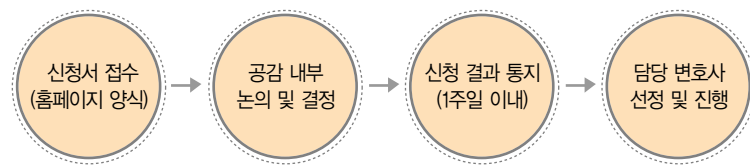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은 2004년 설립 이후부터 비영리 시민·사회·인권단체를 위한 법률지원을 주요 사업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부족한 활동이었지만, 함께하는 즐거움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여러 성과도 있었습니다. 2007년부터는 그 동안의 단체 법률지원 활동을 '희망변론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다시 꾸려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희망변론 프로젝트'는 법률교육, 소송지원, 단체 사업(프로젝트) 법률지원의 세 가지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 가지 내용 모두 연중 수시로 단체의 제안을 받아서 '공감' 내부의 논의와 진행 여부 결정, 그리고 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진행됩니다. 언제라도 소중한 제안을 해주시면, 저희들의 능력이 되는 한 적극적으로 함께하겠습니다.

'공감'은 공익단체에 대한 법률지원을 통하여 인권과 복지, 자치의 현장에서 변화를 일구어 온 공익단체의 '희망의 파트너'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희망변론 프로젝트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단체 사업(프로젝트) 법률 지원 2 찾아가는 법률교육 3 함께하는 공익소송
-----------	---



1. '희망변론 프로젝트'의 각 사업 내용에 대한 신청은 연중 언제라도 가능합니다.
2. 신청서는 홈페이지에 게시된 신청서 양식을 이용하여, 이메일(gonggam@gmail.com)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3. 신청서에서 제안하신 내용을 검토하여, 신청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가급적 1주일 이내에 진행 가능 여부를 통지하겠습니다.

희망변론프로젝트 1 단체 사업(프로젝트) 법률지원

1. 법률지원 내용

- 단체 활동·사업 관련 법·제도 개선 사업 지원(법률 제·개정, 정책 대안 연구 등)
- 단체 활동·사업 관련 법률 상담·자문 지원
- 법률 교육 및 법률 매뉴얼 작업
- 단체 기획 소송 지원
- 기타 단체에서 진행하는 특정 사업에 대한 법률 지원

2. 단체 사업(프로젝트) 법률지원 사례

- 사례 1 '경기도 노인학대예방센터'와 함께 법률매뉴얼 기획 제작 진행
- 사례 2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아동학대사례 법률상담 및 '아동학대사례개입을 위한 법률매뉴얼' 제작
- 사례 3 '성전환자특별법 제정 공동연대' 법률 제정팀, '에이즈예방법 대응 공동행동' 법률 제정팀에 결합하여 법률 제·개정 활동 지원

희망변론프로젝트 2 찾아가는 법률교육

1. 교육내용

- 영역 : 장애인, 이주노동자, 여성, 주민자치, 노인, 아동, 성소수자 등
- 내용 : 위 해당 영역별 전문교육 및 권리구제절차·형사절차 등 공동내용

2. 법률교육 진행 사례

- [여성] 총주결혼이민자 지원센터 법률교육 '이주여성의 국적취득과 이혼절차'
- [장애]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우 대학 '장애인 관련 공익소송의 현황과 과제'
- [이주] 대구 성서공단노조 이주노동자 법률교육 '출입국관리법상 문제와 고용허가제'
- [공익법 일반] 아산 시민예산학교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이해'

희망변론프로젝트 3 함께하는 공익소송

1. 공익소송 대상

- 가. 장애인·여성·성소수자·노인·아동·노숙인 등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의 차별과 인권침해에 관한 법률상담 및 소송지원
- 나. 출입국관리(단속, 보호 등) 절차상 위법한 처분, 사업장변경(사유 및 기간 제한, 절차) 문제 등 이주노동자와 관련한 법률상담 및 소송지원
- 다.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법률상담, 법률지원 안내, 소송 지원
- 라. 난민지위인정과 관련한 법률상담 및 소송 지원
- 마. 지역 시민단체의 주민참여제도 활용과 관련한 법률자문 및 주민소송 등 지원
(주민투표, 주민감사청구, 조례제·개정운동, 주민소환, 주민투표 등)
- 바. 공익제보자 등 불합리한 제도적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공익적 활동에 대한 법률상담 및 소송 지원

>> 희망을 그리는 길 변화와 인권의 가치를 지향하는 **공감**이 함께합니다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2007 연간보고서

» 공감의 활동영역

공익법 일반
빈곤과 복지
여성
이주와 난민
장애인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공감은 사회적 약자, 소수자 인권 문제를 중심으로 구체적 인권을 보장하고, 제도적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 사회 인권의 경계를 확장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실천이 '공익법활동'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확산되어 '법'을 인권 보장과 사회 변화를 위한 열린 도구로서 기능하게 하는 다양한 흐름들이 효과적으로 모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익법 일반

» 공감의 활동 영역

공감은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의 인권문제 등 소수자 인권문제와 공익제보자 지원, 주민자치, 예산감시, 해외 한국기업 감시 등 우리 사회의 변화를 위한 다양한 실천들을 함께하고자 합니다.

주민자치

2006년 성북구의회 업무 추진비 및 관광성 해외여행에 대한 주민소송을 시작으로, 2007년에는 서천군, 청양군, 광명시, 수원시 등을 상대하여 주민소송을 진행하였으며, 주요대상은 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와 공무원의 초과수당, 관광성 해외연수, 지자체 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예산 투입과 같은 사안이었습니다. 강남구, 부천시 등에서 주민감사청구 또는 주민소송 자문을 하였고,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행자부 규칙 제정안과, '보조금의 예산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개정의견 등에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또한 2007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주민소환제를 중심으로 주민자치참여제도에 대한 교육도 진행하였습니다.

공익제보자

'공익제보자와 함께하는 모임'을 통해 공익제보자를 발굴·지원하여 수사법률상담, 민·형사 소송지원을 진행하였습니다.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의 인권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개정과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차별금지법의 올바른 제정을 위한 반차별공동행동 등 각 연대단위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결합하여 입법운동을 하였습니다. 또한 군대내 동성애자 인권침해사건 지원과 HIV감염인 출국명령취소소송을 진행중입니다.

국제인권

다국적기업의 인권침해에 대해, OECD 가이드라인 국내연락사무소 진정 건으로 필리핀 현지조사를 다녀오고 대응모임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버마에 대한 무기수출 관련 재판과 기자회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버마 민주화 관련 연대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활동

- 지방의회 의장·부위원장 업무추진비 남용 및 지방의회의원 관광성 해외여행에 대한 주민소송 및 항소
-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 남용에 대한 주민소송
- 지방자치단체장·부단체장 업무추진비 남용 및 위법한 인공폭포 조성사업으로 인한 예산낭비에 대한 주민소송
- 지방자치단체 음식물쓰레기처리장 설치예산 낭비에 대한 주민소송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수령으로 인한 예산 낭비에 대한 주민감사청구 및 주민소송
- 부천시 주민감사청구
- 학교용지부담금 관련 감사원 감사 신청
- 순천시 민간인 여비 부당지원에 관한 고발
- 공익제보(재단의 비리, 학교운영자의 여학생 성추행 비리 고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기소유예처분 취소 헌법소원
- 공익제보자(중국산 가짜참기름 유통 비리 고발)를 위한 손해배상청구
- 공익제보자(회사내 비리 내부신고)에 대한 무고 등 혐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공익제보자(회사내 비리 내부신고)에 대한 회사의 부당처우에 대하여 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해고무효확인소송
- 공익제보자(KTX 사업 과정에서의 예산낭비 국가청렴위 신고)에 대한 정보통신망법 적용 사건에 대한 민사사건 대리
- HIV 감염인 출국명령 취소소송
- 위장납북어민 보상거부처분취소소송 중개
- 국가유공자 유족 비해당결정취소 행정심판 중개
- 대법원의 재판지연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및 항소
- 국기에 대한 경례 거부 교사에 대한 징직처분 취소소송
- 전보발령 거부로 인한 해고무효확인 소송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조 정의규정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 필리핀 소재 한국기업의 노동3권탄압 관련, OECD 가이드라인 국내연락사무소에 진정서 제출
- 한국기업의 버마가스개발사업과 관련, 하버드대학교 인권클리닉과 공동으로 국가인권위 진정 협의
- 공감 주최 공익단체활동가를 위한 법률교육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주최 37기 사법연수생 전문기관 연수 '민변 사법위 활동 소개'
- 부천시민연합 시민강좌 '직접참여제도의 의의와 추진방향(주민소환제를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주최 활동가 교육 'NGO와 법의 지배 - 공익소송의 실제'
- 대구 에이즈예방협회 주최 공무원 양성교육 강의
- 대한에이즈예방협회 주최 감염인 활동가 강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 '국제인권법 특강'
기독교변호사회 강연 '공감의 공익활동'

- 한국형 인신보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토론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 건설현장의 노-노 갈등 간담회 발제 (대구성서공단노조)
- 차별금지법의 올바른 제정을 위한 토론회/공청회 발제 (반차별공동행동)
- 천주교 주교회의 정평위 세미나 '사형, 그 유예를 넘어' 발표
- 주민소환 토론회 '주민소환제도의 의의' (광주참여자치 21)
-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통제방안' 토론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실)
- 2007한국인권보고대회 '사법개혁 현황과 과제' 발제 (인권단체연석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민변-로스쿨 간담회' 발제/연세대 '로스쿨발전방향' 토론
- '모두를 위한 에이즈예방, 어떻게 가능한가?' 토론회 발제/ 법률 간담회 발제(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공동행동)
- '성전환자 성별 변경에 관한 성전환자 증언 및 전문가 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 유럽사회현장 세미나 패널 토론
- 유엔 보편적 정례검토 워크숍 '유엔인권기구의 한국에 대한 권고' 발표
- 호주 뉴사우스웨일즈대학교 외교연수프로그램(DTP) 인권옹호와 기업 워크숍 '슈에가스프로젝트: 새로운 단계' 발표
- 해외한국기업 워크숍 토론 (사회운동포럼)
- 문화관광부의 예술인회관 건립사업 전면 재검토 촉구 기자회견 및 공대위 의견서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자문의견서 제출 (국가청렴위원회)
- 제주도 해군기지 여론조사 시행 관련 의견서 작성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민원 자문 의견서 작성- 산재보험금 환수 관련
- 성림재단 기부채납 관련 의견서 작성 (성공회 유지재단)
- 고양시 노점상 단속 관련 의견서 작성 (전국노점상연합회)
-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정부 개정안 의견서 (국가인권위원회)
-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대응 공동행동 개정안 해설서
- 유엔인권이사회(HRC) 참가
- 민변 인종차별철폐협약 반박보고서 작성
- 한국기업 버마 무기수출 판결선고 기자회견
- 필리핀 소재 한국기업 노동3권탄압과 관련, 필리핀 현지조사
- 선원법상의 에이즈 검진규정에 관한 자문 (국가인권위원회)
- 법무법인 충정과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협약 중개
- 법무법인 지평 이주노동자활동가 법률매뉴얼 작업 및 법률교육에 재정 지원, 교육 참여
- 법무법인 태평양 파트너십 체결 및 공익활동중개
- 세계한인변호사회(IAKL) 총회 '한국로펌의 공익활동' 발표



2007 한국인권보고대회



HIV/AIDS 감염인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

장서연 공감 변호사

6월의 어느 화창한 토요일, 공감 인턴들과 함께 나비 모양의 날개를 등 뒤에 달고 피켓을 들고 청계천 거리를 행진하였다. 피켓에는 "정부와 국회는 에이즈예방법 정면 개정안을 즉각 통과시켜라" 라는 구호가 적혀 있었다. 2007년 쿼어퍼레이드 중 동성애자인권연대가 'AIDS & Solidarity+' '에이즈와 연대'란 주제로 준비한 퍼레이드 속에서였다. 그곳에서 'HIV/AIDS감염인 인권증진을 위한 에이즈예방법 대응 공동행동'과 여러 다른 인권단체가 함께했다. 도대체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에이즈예방법)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일까.

얼마 전 종영한 '고맙습니다'라는 드라마가 HIV/AIDS 감염인에 대한 편견을 깎겠다는 호평을 받았다. 시청자들은 '봄이'와 그 가족들에 대해 연민을 느끼면서 호응하였고, '봄이'가 푸른도 주민들에게 HIV 보균자라는 사실이 알려진 후 이유 없는 따돌림과 내쫓김을 당할 때 안타까워하고 분노하였으며, 시청률도 꽤 높았다고 한다. 또 다른 편에서는 특급 호텔 프랑스인 요리사가 에이즈 감염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출국하였다는 SBS 뉴스 보도와, 감염인 특히 감염외국인에 대한 관리에 구멍이 뚫렸으며 호들갑을 떠는 기사들이 줄을 이었다. 수혈을 통해 HIV 바이러스에 감염된 초등학생인 '봄이'는 불쌍하고 용서가 되지만, 특급 호텔의 요리사인 '외국인'의 감염사실은 괘씸하고 용서가 되지 않나 보다. 전자가 비감염인의 '드라마'라면 후자는 감염인의 '현실'이다.

국내 감염인의 주요 사망원인 중 하나는 '자살'이며 이는 비감염인의 10배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실태조사가 감염인이 처한 현실을 짐작케 한다. 현행 에이즈예방법(감염인에 대한 인권침해적 요소를 개선하고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겠다는 보건복지부의 개정안도 마찬가지이다) 및 출입국관리법은 감염인 및 '고위험군'이라 일컬어지는 성매매종사자, 동성애자, 외국인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이러한 이중적, 모순적 편견과 공포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특정집단에 대한 강제검진, 역학조사, 외국인에 대한 강제퇴거 등 규정이 그러하다.

감염 외국인이 처한 현실

지난 달 공감 사무실에는 감염인 아버지라는 사람으로부터 급한 전화가 한 통 걸려 왔다. 자신의 아들 A는 중국동포인데 외국국적동포 취업교육 중 건강검진을 받았다가, 어느 날 보건소로부터 어머니와 같이 오라는 통보를 받고 보건소에 나갔더니 그곳에서



HIV 양성반응이 나왔으며 그 날 당일 바로 출입국관리사무소로 통보가 되어 보호실에 며칠간 구금되었다가 강제퇴거 당할 뻔 하였으나 자신이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통사정을 하여 이주일 후에 출국시키라는 명령을 받고 현재 풀려난 상태라는 것이다. 자신은 A의 친아버지는 아니지만 A의 어머니와 몇 년 전에 재혼하여 함께 살고 있고, 아들인 A가 친모와 함께 살기 위하여 한국에 들어왔는데, 이렇게 강제퇴거 당하면 중국에는 A를 돌봐줄 가족도 없고 A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며 A가 강제퇴거 당하지 않을 방법이 없느냐는 내용이었다.

A씨의 사건을 지원하면서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에게 A씨의 친모와 가족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고, A씨도 특별귀화신청 중인 점 등 사정을 참작하여 출국기한을 유예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은 오히려 나에게 '왜 중국 사람들을 도와주느냐', '그 어머니도 중국에서 살다가 한국남자와 결혼해서 한국국적을 취득한 것이지 한국 사람이 아니다. 나도 한국인이면 안타까운 생각이 들겠지만 외국인이고 감염도 한국에서 되지 않았는데, 국내에서 한국 사람과 성행위를 하다가 감염시키면 어떻게 되겠냐.' 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출입국관리법에는 감염 외국인에 대한 강제퇴거를 출입국관리사무소장등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고 법무부는 감염인 인권을 고려하여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체류를 허가하고 있다며 위 규정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무적으로 HIV/AIDS 감염 외국인은 체류의 목적이나 자격, 체류기간의 구분 없이 거의 대부분 입국금지, 강제퇴거 당하고 있다. 실제로 1988년부터 2006년 11월까지 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인으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된 외국인은 총 538명으로 그 중 체류 및 국적취득자는 27명 정도 뿐이며 454명 정도가 강제퇴거 등 출국 조치되었다.

외국인 강제퇴거 규정의 위헌성

에이즈는 전염성이 강한 질병이 아니다. 감염인이 입국하거나 체류한다는 사실만으로 공중의 감염 위험이 높아지지는 않는다. HIV는 물이나 공기를 매개로 전파되지 않으며, 키스나 포옹, 번기를 같이 쓰거나 식사를 같이하는 것과 같은 일상생활의 접촉으로 감염되지 않는다. 전염병예방법에도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을 전염성이 1,2군 보다 상대적으로 약한 3군 전염병으로 분류하고 있다.

나이가 다양한 의약품이 개발되어 HIV에 감염되었다고 하더라도 적절한 치료법을 유지할 경우 감염초기 시대와는 달리 에이즈 발병까지 20년 이상의 수명을 건강하게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그런 점에서 다수의 유럽 국가에서는 에이즈를 법정전염병으로 규정하지 않고 만성질환 정도로 취급하고 있으며, 오히려 HIV/AIDS를 '사회적 질병'으로서 감염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금지하는 정책을 마련하는데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도 HIV/AIDS를 법정 전염병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출입국법상 전염병에 관한 입국금지 대상자를 전염병의 종별로 제한하고 있으며, HIV/AIDS를 출입국법의 제재를 받지 않는 5급 전염병으로 분류하여 HIV 감염을 강제퇴거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2007년 2월, 국가인권위원회도 외국인 강제퇴거 등은 HIV가 외부에서 전염되는 질병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주어 외국인에 대한 차별 의식을 조장할 수 있으며, 국내 거주 감염 외국인이 검사를 기피하고 치료를 포기하게 하여 오히려 HIV/AIDS 관리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어 효과적인 예방정책을 위해서는 외국인이라도 감염 사실만으로 내국인 감염인에 비하여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하였다. 이미 국제사회는 HIV/AIDS 감염을 이유로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공중보건 이론 근거는 없으며, 현행 국제 보건 규정에 따르면 국제여행에 허가를 얻어야 하는 병은 오로지 황열병 뿐이므로, HIV 감염 상태만을 가지고 이동 및 거주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해외여행자들을 상대로 HIV 검사를 하는 것은 차별적이며 공중보건의 명분에 의해 정당화될 수 없다는 사실에 동의하고 있다.("HIV/AIDS와 인권에 관한 국제 가이드라인")

거주·이전의 자유는 오늘날에는 행복추구권, 인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인격형성의 자유 등의 성격도 갖는 다면적·복합적 자유로 파악되고 있다. 즉 거주·이전의 자유(해외여행의 자유)는 인간의 행복추구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자신의 선택에 의하여 다양한 자연과 사람과의 교류나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하는 점에서 인격형성에 필요한 불가결한 기본권이다.

HIV/AIDS는 하나의 질병일 뿐이다. HIV 보균자도 AIDS 환자도 비감염인과 마찬가지로 당연히 치료를 받을 권리, 직업을 가지고 살 권리, 여행을 할 권리, 가족과 함께 살 권리가 있다. HIV 감염 사실만을 기준으로 행해지는 외국인에 대한 입국금지, 강제퇴거는 공중보건이라는 명분으로 정당화 될 수 없으며, 헌법 및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금지하는 병력(病歷)에 의한 자의적인 차별이며 인권 침해이다.

빈곤과 복지

» 공감의 활동 영역 노숙인·노인·아동·청소년 인권 향상을 위해 관련 법률상담과 법률매뉴얼 제작작업, 법률교육, 단체자문, 법제도 개선 연구 등을 진행합니다.

빈곤영역에서 공감은 '노숙인의 인권과 복지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주최하는 노숙인학교에 파산 및 면책절차에 관한 법률교육을 7회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노숙인다시서기지원센터'와 함께 서울역 철도공안에 의한 노숙인 인권침해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또 비닐하우스촌 법률지원 및 문패달기 등을 주거권연합과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비닐하우스촌 지원은 매주 4일간 3주 정도의 일정으로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 소재 비닐하우스촌에 대한 문패달기, 마을청소, 법률상담, 마을실정알기 등 공감인턴, 사법연수생들과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함께 비닐하우스촌 주소지찾기 소송을 진행하여 행정소송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아동 영역에서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을 지원단체로 선정, 기존 상담 경험과 아동학대전문기관 상담원들과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집중적 논의를 거쳐 아동학대예방법률매뉴얼을 발간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들을 대상으로 법률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전국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법률 자문(아동의 친권관계, 아동보호처분의 적법성, 가해자에 대한 고발 등)을 진행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범무법인 총정에 연계하여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연 10건의 친자관계 등 소송, 고정적인 자문 및 법률지원을 하도록 하여 중개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청소년 영역은 국가청소년위원회 인권분과 참여를 계기로 학내 두발자유화, 학원 야간교습시간 제한과 관련한 이슈에 대해 의견서 제출, 공청회 참여 등의 활동을 하였습니다.

노인 영역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 노인법률지원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전국적으로 70여명의 변호사들로 구성된 '노인법률지원변호사단'이 출범하였습니다. 공감은 한국노인복지관협회와 업무 협약식을 체결하고, 전국 노인복지관 및 노인학대예방센터 상담원 대상으로 법률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역 노인복지관을 대상으로 법률상담 및 법률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활동

비닐하우스촌 주소지전입신고 수리거부처분 취소소송 의료급여법시행령 본인부담금 부과에 대한 헌법소원

내일 청소년 성폭력 상담소 법률교육 '형사절차상의 소년법리뷰'
 노숙인복지와인권을실천하는사람들 파산학교 법률교육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상담원 대상 '아동학대 사례 개입을 위한 법률문제'
 영등포노인종합복지관 법률교육 및 법률상담 '노인에 대한 재산적 학대'
 대한변호사협회 주최 전국 노인복지관 상담원 법률교육 '노인학대의 형사문제'
 송파노인복지관 법률교육 '유산, 상속에 관한 법률문제'
 내일청소년상담소 성폭력가해자 교육 '청소년인권과 성폭력관련법률'

'학원교습시간제한과 청소년의 인권' 토론회 (한국YMCA전국연맹)
 강남·서초·송파구 소재 비닐하우스촌에 대한 실태조사 및 법률상담
 국가인권위원회 2007 안양소년원, 광주소년원 방문조사 참여 및 관련 보고서 작성
 국가인권위원회 부랑인시설 방문조사 참여
 000 교사 전교조 재심위원회 제출 의견서
 공감, 다시서기상담보호센터 공동 주최 노숙인 폭력피해 실태조사



비닐하우스촌의 주거권

김영수 공감 변호사

주택보급율이 100%를 넘는 시대를 살고 있지만, 최저주거기준에도 훨씬 못 미치는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삶의 동지를 틀고 있는 주거빈곤층 중 하나가 비닐하우스촌이라 불리는 '신발생(미등재) 무허가 주거지'이다. 1970년 이후 진행된 급격한 공업화 과정에서 형성된 도시지역 빈민들의 전형적인 주거지역을 흔히 '달동네' 혹은 '산동네'라 했는데, 1980년대 접어들어 이 달동네는 다시 재개발의 주된 대상이 되었고, 가난한 달동네 주민들은 더욱 외곽으로 이주하거나 새로운 형태의 불량촌을 형성하게 되었고, 이처럼 새롭게 형성된 불량촌이 비닐하우스촌이다.

현재 수도권에만 47개 마을, 10,000여 세대, 35,000명 정도의 주민이 살고 있는 비닐하우스촌은 개발사업으로 인해 철거될 위기에 처하거나 화재로 인해 보금자리를 잃어버렸을 때, 오염된 지하수 등 온정의 시각에서 언론을 통해 주목받기도 하였고, 한편으로는 비닐하우스촌이 투기꾼들의 집결지인 듯 부정적인 이미지로 그려지고있다.

이곳에도 사람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비닐하우스촌의 환경은 참으로 열악하다. 최소한의 주거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살기에는 대단히 부적절한 환경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환경에도 달리 주거지를 찾지 못한 사람들은 마을을 형성하여 이곳을 생활의 근거로 하여 일용근로, 파출부 등으로 생계를 꾸려가고 자녀를 교육하면서 살아가고 있으나, 비닐하우스촌은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사람이 거주하는 곳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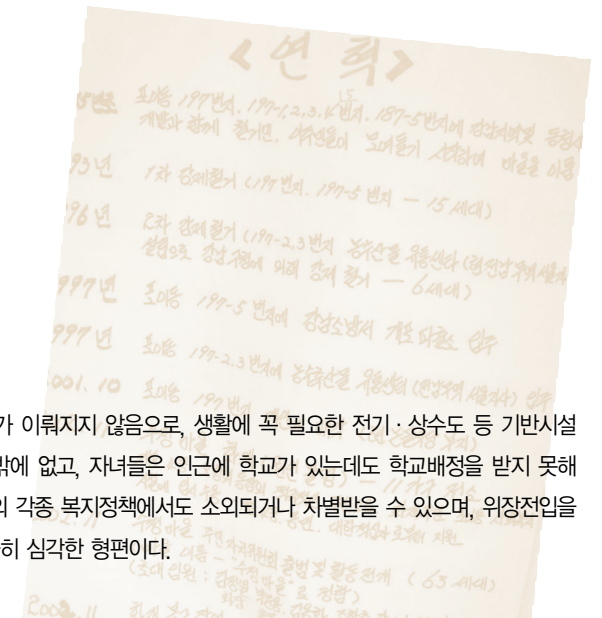
행정기관은 비닐하우스촌에 거주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비닐하우스촌을 사람이 거주하는 주택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그에 따라 주민등록 등재를 계속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비닐하우스촌 주민들은 분명 시, 군, 구 등 행정구역 안에 명백히 생활을 해오고 있음에도 주민으로는 인정받을 수 없는, 유명과도 같은 존재로 취급되는 셈이다.

주소지 등재부터

우리나라에서 주소지가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 주소지 등재가 이뤄지지 않음으로, 생활에 꼭 필요한 전기·상수도 등 기반시설의 공급이 불안정하거나 비정상적인 방법을 통해 이뤄질 수밖에 없고, 자녀들은 인근에 학교가 있는데도 학교배정을 받지 못해 먼 거리에 있는 학교를 통학해야 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복지정책에서도 소외되거나 차별받을 수 있으며, 위장전입을 할 수 밖에 없는 등 주민들의 불편과 경제생활의 불이익은 가히 심각한 형편이다.

현행 주민등록법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구역 안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를 주민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2003년에는 주택법에 최저주거기준에 관한 내용이 삽입되었고, 2004년에는 빈곤격차차별시정위원회의 요청에 의해 행정자치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관내 빈곤층 집단거주지역을 조사한 뒤 지역에 꾸준히 살아온 것으로 확인된 주민들을 적극 전입조치"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현재 살고 있는 주소로의 주민등록의 등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라 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의 등재 여부는 개발사업으로 철거될 때 공공임대주택 제공 등 주거대책의 존재여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민들의 주거권 및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점에서 일선 행정기관의 주민등록 등재 또는 전입신고 거부는 비판받아 마땅할 것이다.

공감에서는 7월부터 주거권실현을위한주민연합과 함께 비닐하우스촌 주거민을 위한 법률상담과 문패달기를 진행하고 있다. 하수 시설이 되어있지 않아 길은 항상 질퍽거리고, 몇십 가구가 함께 공동수도와 화장실을 사용하는 마을이 대부분이었다. 3년만 살다 나가려고 했는데 10년 넘게 살고 있는 한 주민은, 일 나간 사이에 철거되면 어쩌나 불안한 마음으로 집을 나선다고 한다. 또 비가 올 때마다 마음을 즐기고, 겨울이면 화재걱정에 제대로 잠을 이룰 수 없다고 했다. 주거권 문제는 개인이 혼자 감당할 수 없는 문제이다. 집 없는 사람들을 몇 푼 돈으로 보상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밀어내기만 해서는 안 된다. 정부차원의 주거 빈곤층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 공감의 활동 영역 여성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를 예방, 구제하는 활동을 진행합니다. 특히 결혼이주여성의 인권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소송지원, 제도개선 활동을 통해 진정한 다문화사회 여건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공감은 2007년, 가정폭력 피해 중국여성들의 가사소송을 지원하여 승소하였고, 성매매피해 필리핀여성의 업주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리모로 이용당한 베트남여성의 손해배상청구 및 양육자지정변경신청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진행중이며, 정신장애를 알리지 않은 남편을 상대로 한 필리핀여성의 이혼소송 등 이주여성 인권 향상을 위한 소송지원 활동 등을 하였습니다.

공감은 '이주자 지원단체 활동가 교육'을 주최하여 이주여성 단체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여성 결혼이민자관련 법률,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관련 법률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여성 및 인권 관련 학회에서 결혼이주여성의 인권실태 및 법적쟁점에 관한 강의 등 20여차례 법률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한국사회에서 국제결혼이 급증함에 따라 국제결혼 중개업이 성행하게 되었고 중개 과정 속에서 여성 차별적이고 인종차별적인 인권 침해행위가 문제되어 왔습니다. 공감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농어민 국제결혼 비용지원 사업 관련 대응활동과 국제결혼중개 규제 법안 마련을 위한 입법 활동을 진행해왔습니다. 지자체의 농어민 국제결혼비용지원 사업에 대한 문제를 공론화하고, 국제결혼중개 규제 법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및 연구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요활동

가정폭력 피해 중국 여성 가사소송 지원
 사망 배우자의 자(子)가 제기한 혼인무효소송에 대한 중국 여성의 추완항소 지원
 대리모로 이용당한 베트남 여성의 손해배상청구 및 양육자지정변경신청 소송지원
 성매매피해 필리핀여성 3인의 업주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항소심 지원
 필리핀 여성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변경 청구
 필리핀 여성 정신장애 불고지 남편 상대 이혼소송
 평택 새움터 성매매피해여성 채무부존재,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청구

안산시청 주최 이주자 지원단체 활동가를 위한 법률교육
 안산시청 주최 필리핀, 베트남, 러시아 여성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법률교육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중구센터 가정폭력 상담원 대상 이주여성관련 법률 교육
 이주여성 1366 몽골, 중국, 러시아, 필리핀, 베트남 상담원 대상 법률교육
 결혼이민가족지원연대 주최 여성결혼이민자 관련 법률교육
 서울여성장애인연합 주최 여성장애인 성폭력 상담원 양성 교육
 유엔인권정책센터 주최 국제결혼 캠페인-베트남 현지 공무원 및 상담원 대상 한국법률 강연
 이화여대 한국근현대사연구회 주최 결혼이주여성의 인권실태 및 법적 쟁점 강연
 사법연수원 제38기 법여성학회, 인권법학회 공동주최 결혼이주여성의 인권실태 및 법적 쟁점 강연
 가족재단 주최 이주여성 폭력 관련 법률강의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중구 가정폭력상담원 교육 과정 중 이주여성 관련 법률교육
 검찰청 성폭력 전담검사 교육 '장애여성에 대한 성폭력'

'국제결혼중개 규제 법안 마련을 위한 입법 공청회' 토론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
 '지방자치단체의 농어민 국제결혼 비용지원 사업,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 기획 (이주여성정책네트워크)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토론 (여성가족부)
 '충북지역 농어민 국제결혼 비용지원 사업 반대 토론회' 토론
 지방자치단체 농어민 국제결혼 비용지원 사업 관련 토론회 발제 (광주여성의전화)
 베트남 국제결혼 이주여성 프로젝트 설명회 발제 (유엔인권정책센터)
 한국여성연구원 30주년 기념 심포지움 결혼이주 인권실태 발표
 이주여성의 현황 및 법적 지위에 관한 세미나 발제 (서울지방변호사회)
 국제결혼이주여성 국제컨퍼런스 발제 (서울대학교 여성연구소)
 2007 한국인권보고대회 국제결혼이주여성 인권실태 관련 발표
 (인권단체연석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배타적인 정부의 결혼이주민 정책

소라미 공감 변호사

1. 사회통합 의무화 정책에 내재되어 있는 차별적 시선

2007. 9. 법무부는 결혼이주자의 한국국적 취득 요건으로 한국어 필기시험 통과 또는 사회통합교육 이수율 의무화할 것이며 이를 이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체류 상 불이익도 부가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결혼이주자에 대하여 귀화 필기시험을 면제한 결과, 국어능력·한국사회 이해 부족으로 인한 사회 부적응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부적응 현상은 국제결혼 2세에게 영향을 미쳐 언어능력의 취약함으로 이어지고 있기에 이와 같은 '문제적'인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라고 한다.

통합교육 의무화 정책은 국제결혼 가정의 2세들의 더딘 한국어 취득 능력을 '문제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적이고 배타적이다. 국제결혼 가정 2세의 한국어 능력의 취약함이 '이국어'를 쓰는 모(母) 또는 부(父)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진단을 통해 외국인인 부모의 한국어 능력을 단기간내 높여야한다는 발상에서 사회통합의무화 정책은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접근 방식의 사회통합의무화 정책은 나와 다름을 구별하고 문제적으로 바라보는 차별적 시선을 내포한다. 부와 모의 언어가 다른 가정에서 출생한 2세들이 부 또는 모 일국의 언어를 취득하는 속도가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는 부모를 가진 2세와 비교했을 때 더딘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오히려 더딘 한국어 능력을 '문제시' 하는 접근 방법이 국제결혼 가정의 아동에게 자신이 남들과 다르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부 또는 모를 거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돼 아동의 사회적 인격 형성에 장애로 작용하여 오히려 문제를 심화 왜곡시킨다. 국제결혼 2세들의 더딘 한국어 취득 과정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래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모 또는 부를 자연스럽게 자랑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사회·문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부터 결혼이주자의 사회통합 교육은 출발되어야 한다.

정부의 사회통합 의무화 정책이 스스로 표명하고 있듯 결혼이주여성의 부적응을 '돕기' 위한 취지로서 이주여성의 '인권' 적 측면에서 '지원' 서비스로 접근하고자 한다면 '패널티'(국적 취득 불허, 체류상 불이익)를 부가하는 방식의 통합 교육 '의무화' 정책은 부적절하며 그 취지에 역행한다. 한글교육 참여를 불허하는 가족들의 인식 부족, 한글교육 정보 및 장소에 대한 부족한 접근성, 교육 내용의 불균질성 등이 결혼이주자 사회 적응 프로그램의 현주소라면 이와 같은 취약한 환경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나가는 방향으로 정책 방향은 조정되어야 한다. 사회적 인프라는 구축하지 않은 채 일단 사회통합교육을 '의무화' 하면 사회통합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발상은 너무나도 안일하고

단순하다. 서로 다른 문화, 언어, 환경을 극복하고 한국 사회에 살아남기 위해 홀로 분투하는 결혼 이민자의 어깨에 또 다른 돌덩이를 얹는 것이다. 다문화가 공존할 수 있도록 사회적 인프라를 정비해야할 국가의 책무를 결혼이주자 개인의 부담으로 전가하는 것이다.

2. '농어민 지역 국제결혼 비용지원사업' 을 통해 드러나는 국제결혼에 대한 왜곡된 접근 관점의 문제

지방자치단체는 "열악한 농·어촌 환경으로 여성들의 농어촌 결혼 기피" 및 "저출산 추이 및 노령화 사회 진입으로 인구 감소"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농어민 후계자 생활안정과 영농의식 고취"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2005년부터 소위 "농·어촌 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지역 내 일정기간(1년~3년) 거주한 일정 연령(30세~35세) 이상의 미혼 남성이 국제결혼을 할 경우 결혼중개 수수료의 반액을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이루어져있다. 비용 지원은 대부분 혼인신고 또는 배우자의 외국인 등록을 마친 후 1~3개월 내 사후적으로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2007. 6. 기준으로 "농어민 국제결혼비용 지원 관련 정책"은 3개 광역시도와 60개의 시군에서 이 시행되고 있으며 특히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전국 246개 중 24.7%가 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한국여성이 기피하는 농·어촌 지역의 신부 자리를 베트남 등 아시아 여성으로 대체하려는 것으로 마지못해 있으면 아시아 지역의 여성을 데려올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킴으로서 우리 사회에 국제결혼에 대한 인종 차별적이고 성 차별적인 왜곡된 인식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 또한 농·어촌 지역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동아시아 여성을 대체함으로써 임시방편적으로 해결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문제의 접근방식에 있어서도 문제적이다. 한국 여성들의 농·어촌 기피 현상은 열악한 농·어촌 현실에서 비롯된 것으로 농어촌 지역의 경제 개발, 삶의 질의 향상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통해 풀어야 할 과제이지 한국 여성이 정착하기를 기피하는 농·어촌에 동남아시아 여성을 이주하도록 하여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국제결혼을 통한 동남아시아 여성의 농어촌으로의 유입을 통한 농어촌의 인구증가는 일시적 현상에 그칠 것이며 농어촌 인구의 공동화 현상에 대한 종국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를 예방, 구제하는 활동을 진행합니다. 특히 출입국과 관련하여 단속, 보호, 강제퇴거 절차상의 인권 보호를 위한 활동과 난민신청자들이 적절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심사를 받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결국 “농어민 국제결혼 비용지원 사업”은 국제결혼 중개업자에게 이윤을 보장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현재 국제결혼 중개업체에 의한 국제결혼은 상대방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제공과 여성을 상품화하는 진행방식으로 이주여성에 대한 인권침해가 심각한 현실이다. 그런데도 지방자치단체는 인권침해적인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규제하려는 움직임은 전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앞장서서 한국의 남성들을 “인신매매”적인 국제결혼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또한 각 지자체의 국제결혼지원사업을 통해 이루어지는 국제결혼의 주 상대국인 베트남과 필리핀은 상업적인 국제결혼 중개행위가 엄연히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는 상대국이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업적인 국제결혼 중개 행위를 지원·조장하고 있으며, 자국민 남성들이 해외에서 불법행위를 하도록 내몰고 있는 것이다.

3. 앞으로 과제

지난 2007년 8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발표한 한국정부에 대한 최종 권고문에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인권 문제가 특별하게 언급되고 있다.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한국 내 인신매매적인 국제결혼 증가와 국제결혼 가정 내 만연한 가정폭력의 문제에 대하여 우려를 표하면서 그에 대한 대책으로 결혼중개업자의 활동을 규제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할 것과 결혼중개업자와 배우자의 학대로부터 이주여성을 보호할 수 있는 추가적인 정책과 조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다. 나아가 한국 정부가 이주여성에게 그들의 권리와 구제방법, 가정폭력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해 이용 가능한 수단을 알려주도록 권고하고 있다. 동시기에 발표된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한국정부에 대한 최종권고문에도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인권 문제에 대하여 동일한 취지의 우려와 권고가 제기되었다. 한국의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인권문제는 더 이상 일국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사회의 눈과 귀가 집중된 국제화된 이슈인 것이다.

한 사회의 인권지수가 그 나라에서 가장 차별받는 계층의 인권상태로 가늠할 수 있다고 한다면 국제결혼 이주여성 이아말로 ‘이주민’으로, ‘여성’으로, ‘빈곤층’으로 겹겹으로 차별받는 계층이라는 점에서 우리사회의 인권저대라 할 것이다. 앞으로 한국 사회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와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권고를 받아 안아 국제결혼의 성립과 정착의 전 진행과정이 국제 사회의 인권의 기준에 부합하도록 법·제도를 정비해나가야 할 것이다.

소송

법무부 난민인정처리지침에 대한 정보공개를 불허하는 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냈고, 중국인에 대한 난민인정불허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중국인 최초의 난민인정판결을 이끌어냈으며, 현재 모두 6건의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소송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산업연수생 관리 의무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산업연수생 퇴직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으며 고용허가제의 사업장 변경 3회 제한에 대한 헌법소원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감은 ‘이주노동자 지원단체 활동가 법률교육’을 기획하여 전국 4개 지역에서 이주민 관련 단체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법률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여수화재참사 공동대책위원회, 민변 인종차별철폐협약 반박보고서 작성 태스크포스팀(TFT), 민변 이주노동자 인권 소위, 이주민 노동권·인권 차별 철폐를 위한 공동행동 등에 결합하여 법제도개선을 위한 조사 및 연구활동을 하였습니다.

주요활동

버마 난민인정불허결정처분취소소송 항소심 / 버마 여성 난민인정불허결정처분취소소송
 버마 8인 난민불허처분 취소소송
 중국인에 대한 난민불허처분 취소소송
 법무부 난민지침에 대한 정보공개불허처분 취소소송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업주의 폭행 및 경찰공무원의 강제연행 손해배상소송
 여수보호소사망사건 집회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적용 사건 형사변론
 이주노조 ILO 진정 자문
 고용허가제의 사업장 변경 3회 제한에 대한 헌법소원
 중기협외의 산업연수생 관리 의무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산업연수생 퇴직금청구 소송

공감 주최 이주자 지원활동을 위한 권역별 법률교육 - 대전, 광주, 대구, 서울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난민 특강
 법무부 출입국 관련 직무교육
 이주노조 농성장 '단속' 관련 교육

'여수 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 공동대책위 평가와 과제' 토론 / 미등록이주노동자 합법화 토론회 /
 여수화재 사건 국가인권위 직권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서(여수 화재참사 공동대책위원회)
 미등록이주민 단속토론회 '출입국과 경찰' 발표 (국가인권위원회)
 워크숍 '한국의 미등록이주민과 국제인권' 발표 (미등록이주민에 관한 국제협력네트워크(PICUM) &
 국제이주민권리(MRI))
 '국제법체계에서 이주민의 가족결합권에 대한 기본접근방법의 재구성' 발표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이주정책연구소(COMPAS))
 '유엔 이주권리협약 비준을 위한 시민운동의 과제' 토론 (한국사회포럼)
 다함께 동부포럼 '우리는 왜 이주노동자를 환영하여야 하는가' 발표
 2007한국인권보고대회 '한국의 이주민과 국제인권' 및 이주분야 총괄 발표
 (인권단체연석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한국내 난민의 보호' 발표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인권소위)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원영안, 법무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 대한 의견서 (인권단체연석회의)
 경찰의 불법체류자 단속 관련 의견 (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사법경찰관의 강제연행에 대한 자문의견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외국인보호소 실태조사 참여 및 관련 보고서 작성
 출입국 단속 보호 등 인권친화적 제도 개선 연구(법무부 용역) TFT (대한변협 이주외국인인권소위)
 국내법원의 난민관련 판례 동향 작성 (UNHCR 난민변호사 네트워크)
 유엔인권이사회 민변 서면진술서 '한국내의 이주민의 권리' 제출(제네바, 스위스)
 강제이주 여름학교 참가 (옥스퍼드, 영국)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난민연구소(RSC)
 국가인권위원회 보호소이송 자문의견서 제출

'불법체류자' 라는 말부터 버리자

정정훈 공감 변호사

언어는 감수성의 중심 무대다. 언어는 세상을 바라보는 창이자, 사물과 존재에 이르는 길이다. 언어는 때로 '존재의 진실'을 가리기도 하고, 때로는 '인식의 지평'을 넓히기도 한다. 언어는 우리의 의식이요 무의식이고, 전략이고 실천이며, 무기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근로자'와 '노동자'라는 규정 사이에는 '찐한' 의식/무의식의 싸움이 들어있고, 서로 다른 이해와 감수성이 녹아있다. 동일한 대상을 지칭하는 '근로자'와 '노동자'라는 말은, 어쩌면 서로 다른 인식과 실천을 내용으로 하는 서로 다른 존재들을 만들어 내고 있는지도 모른다. 언어가 존재의 진실을 가리는 대표적인 예로는 '산업연수생'의 경우를 들 수 있다. '산업연수생'은 더 이상 '노예'가 허용되지 않는 사회에서 이방인에게 노예의 자리를 할당하는 방식이었다.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우리는, '연수생'이라는 말로서 별 죄의식 없이 타인에게 '노예'의 삶을 강제할 수 있었다.

'연수생'이라는 언어의 전략 없이는 이 제도가 유지될 수 없었을 것이다. 또 최근 여수에서는 '보호소'라고 부르는 '감금' 시설에서, 무고한 생명들이 쇠창살에 갇힌 채 '문을 열라'고 외치며 죽어갔다. 보호 없는 곳을 '보호소'라고 부르며, 적법절차의 통제를 쉽게 비켜갈 수 있었다. '연수생', '보호소'라는 말로서 가리고 있는 현실의 폭력성을 보려는 근본적인 노력이 존재하지 않는 한, 우리의 인식과 실천은 제자리일 수밖에 없다.

또한 우리는 '외국인근로자'와 '이주노동자'라는 규정 사이에 놓여있는 차이만큼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실천한다. '불법체류자'와 '미등록이주노동자'라는 규정도 마찬가지다. '불법체류자'라는 규정은 메마른 법의 언어, 행정의 언어다. '체류'가 '불법'이므로 그 '불법'은 행정적인 처분의 대상일 뿐이다. 사람 자체가 불법/합법의 대상일 수 없으나, '사람'을 '체류'의 관점으로 한정함으로써 건전지 '폐기처분' 하듯 간단히 '행정처분' 할 수 있는 대상으로 바꿔 놓는다.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통해 구체적인 '사람'을 지워버리는 것, 그것이 '불법체류자'라는 규정이 수행하는 행정의 전략이다. '불법체류자'라는 규정 하에서 우리는, 다 쓴 건전지를 폐기처분하는 수준 이상의 인식과 실천을 얻기 어렵다.



반면 '미등록이주노동자'라는 규정을 통해 우리는 다른 인식과 실천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 '노동'하는 육체의 건강함과 고단함을 생각할 수 있고, 우리 바깥에 존재하는 '외국인'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이주'해서 살아가는 '이웃'의 모습을 읽을 수 있다. 그리고 '미등록'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그들에게 더해지는 곤궁한 처지를 되살펴 볼 수 있다. 무엇보다도 존재 자체를 간단히 '불법'으로 규정하는 위험에서 빠져 나와, 지금 여기에서 살아가는 구체적인 '사람'과 만날 수 있다.

체류'는 '불법'이지만 '사람'이 불법일 수는 없기에, 그들이 지금 이곳에서 살아가는 한, 노동에는 정당한 대가가 주어져야 하고, 아플 때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자신의 억울함을 법에 호소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자녀들은 교육을 받아야 하고, 외로울 때 함께할 친구와 노래가 필요하다. 그들도 우리처럼 '빵과 장미' 모두가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피해를 신고하려 간 경찰에 잡혀서 출입국관리소로 인계되고, 체불된 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이 나라를 떠날 각오를 해야하며, 단속이 무서워 쉬는 날에도 움직일 수 없다.

'미등록'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왜곡되는 그들의 삶의 조건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 일례로, 미국 LA주의 한국영사관은 '불법체류자'인 재외국민의 불이익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재외국민 신분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영사관 신분증은 LA 경찰을 포함한 모든 공공기관에서 인정되고, 전기·수도·전화신청·아파트 임대 계약·은행계좌 개설에까지 다양하게 쓰이고 있다고 한다. '불법체류자'라는 규정으로는 결코 담아낼 수 없는 문제의식이다. 영사관이 그들을 '국민'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가능한 조치들이다.

'정의의 여신'은 눈을 가리고 있다. 여신이 눈을 가린 이유는 다른 조건들을 보지 않은 채 정의를 그 자체로 판단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인간인 우리도 눈을 감자. 행정공무원의 안경을 쓰고 체류의 불법 여부를 보려 하지 말고, 살아 숨 쉬는 인간을 그대로 만나자.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불법체류자'라는 언어부터 던져버려야 한다.



2006년부터 청계천 접근권 차별과 관련하여 서울시와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여 현재 항소를 진행중입니다. 시설 운영자에 의한 입소 정신지체 장애여성에 대한 성폭력 사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지난해 6월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또한 장애인시설(복지재단) 비리고발 제도개선 요구중 기소된 농성장장애인과 인권활동가들을 위한 행사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장애인 단체 실무자와 자원봉사자 및 법률상담 연수생을 대상으로 정신보건법, 지적장애인특별법, 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 등에 관한 법률교육을 6차례 실시했습니다.

법제도개선과 관련하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2007년 4월 제정되고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어,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와 함께 법 시행령, 시행규칙 가이드라인 작업을 진행하였고, 해설서 사법행정 부분을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성년후견제도 법제화 작업, 지적장애인특별법안 작업, 정신장애인 관련 토론회, 공청회 및 법제연구를 진행하며 입법활동을 하였습니다. 또한 작년에 이어 KBS 제3라디오 장애인인방송인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프로그램 중 매주 화요일에 '장애인의 인권찾기'에 출연하여 장애인의 인권에 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요활동

청계천 접근권 차별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소송
시설 운영자에 의한 입소 정신지체 장애여성에 대한 성폭력 사건 손해배상소송
공직선거법상 청각장애인 차별조항 헌법소원
청각 장애여성 성폭력 피해 사건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장 작성
장애인시설(복지재단) 비리고발 제도개선 요구중 기소된 농성장애인과 인권활동가들을 위한 형사변론
장애인시설(복지재단) 비리고발 제도개선을 요구한 장애인공동투쟁단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청구에 있어 피고를 대리

지역사회정신보건자원봉사단 '정신보건법의 문제' 강의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정신보건 현황과 개선방안' 강의
굿잡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시민학교 '자립생활조례제정의 필요성 및 실천전략' 강의
원주장애인복지관 '장애인차별금지법' 강의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법률상담 연수생 교육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우대학 열린강좌 '지적장애인특별법 제정 방향' 강의
국가인권위원회 상담센터 직원 법률교육 '정신보건법의 제문제'

일본 성년후견 관련기관 방문연수 및 보고회 토론 (성년후견추진연대)
'성년후견제 도입방안' 토론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신장애인 인권개선활동 '정신장애인 인권현황과 개선방안' 토론 (법과사회이론학회)
'장애인거주시설 서비스 혁신방안 공청회' 토론 (성공회대 사회복지연구소)
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 '성동구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의
법률적 검토' 토론문 발표 (성동자립생활지원센터)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가이드라인 작업 /
해설서 사법행정 부분 작성(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장애인차별실태 분석 및 유형화에 관한 연구 (양극화·민생대책위원회)

인신보호법, 국회를 통과하다

[인권오름 2007-12-04] **염형국** 공감 변호사

남자 2명이 집으로 찾아와 "경찰관인데 조사할 게 있으니 문 좀 열어달라"고 했다. 경찰이라는 말에 깜짝 놀란 유씨가 문을 열어줬지만 이들은 경찰을 사칭한 한국응급구조단원이었다. 그들은 "부인과 딸이 당신을 정신병원에 넣어달라고 하니 같이 가자"며 발을 걸어 유씨를 넘어뜨리고 목을 조른 뒤 양손에 수갑을 채웠다. 팔과 다리에는 포승줄이 감겼다. 유씨는 응급차에 실렸고 충남 공주의 한 정신요양원으로 옮겨졌다. <<경향신문> 2006년 8월 7일자

인신보호법은 헌법적 요청

나경원 의원(한나라당)이 2005년 1월 대표 발의한 인신보호법이 지난 11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형사 피의자에 대해서만 구속적부심이 인정되어 위법한 행정처분 또는 사인에 의한 시설 수용으로 부당하게 인신의 자유를 제한당하고 있는 경우는 인권의 사각지대로 남아있었다. 이번 인신보호법의 통과로 이런 경우에도 법원에 구제청구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헌법 제12조 제6항에는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경우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처럼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경우에 적부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는 헌법의 명문규정은 학자들의 해석으로, 입법의 불비로 '수사기관에 의하여 체포·구속된 자'로 한정하여 적용되어 왔다. 그러나 이는 명백히 인신의 자유를 포괄적으로 보장하려는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다.

인신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인권이다.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갇히는 것'은 엄격한 법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 그러한 강제구금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적법성과 정당성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범죄인에게도 철저히 보장해야 하는 인신의 자유를 '보호'와 '치료'라는 미명 아래 아무런 통제 장치 없이 '구금'이 행해졌던 것이다. 위법한 행정처분 또는 사인에 의한 시설 수용으로 인해 부당하게 인신의 자유를 제한당하고 있는 개인에게 강제구금에 대한 구제절차를 마련한 것은 인신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려고 하는 헌법적 요청이다.

국회를 통과한 인신보호법

인신보호법은 대통령의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법인 또는 개인, 민간단체 등이 운영하는 수용시설에 수용·보호 또는 감금되어 있는 피수용자는 수용이 위법하게 개시되거나 적법하게 수용된 후 그 사유가 소멸되었음에도 계속 수용되어 있는 때에는 피수용자, 그 법정대리인·후견인·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동거인·고용주가 법원에 그 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형사절차에 의한 체포·구속된 자, 수형자 및 출입국관리법에 의하여 보호된 자는 제외되고,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 내에 그 법률에 따른 구제를 받을 수 없음이 명백해야 한다.

구제청구는 구제청구자의 주소 및 성명, 수용이 위법한 사유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법원은 구제청구에 대하여 지체 없이 수용의 적법 여부 및 수용을 계속할 필요성 등에 대해 심리를 개시해야 하고, 필요한 때에는 관련 전문가 등에게 피수용자의 정신·심리상태에 대한 진단소견 및 피수용자의 수용 상태에 대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직권 또는 구제청구자의 청구에 의해 피수용자의 수용을 임시로 해제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피수용자와 구제청구인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법원은 구제청구사건을 심리한 결과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결정으로 피수용자의 수용을 즉시 해제할 것을 명해야 한다. 또한 법원은 구제청구사건의 재판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제청구자 또는 구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그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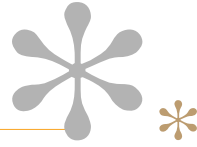
하지만 인신보호법에서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보호된 자를 배제한 것은 문제이다. 외국인보호소의 경우 단속과 보호 그리고 강제퇴거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행정기관에 의해 체포와 구속, 감금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사법적 통제에서 배제시키는 것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경우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헌법 제12조 제6항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또한 피수용자가 수용시설에 위법·부당하게 구금되어 외부와의 소통권이 철저히 차단되어 있는 상황에서 피수용자가 직접 구제청구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많은 경우에 피수용자들이 가족들에 의해 수용시설에 보내지고 있음을 고려하면 법정대리인 등이 구제청구를 하기를 기대하는 것도 무리다. 따라서 구제청구권자를 국가인권위원회와 피수용자의 부당한 수용사실을 알게 된 자로 확대해야 하고, 피수용자 본인의 구제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해 수용시에 수용이유와 법원에 구제청구할 수 있는 권리 및 그 절차에 관해 사전고지를 의무화시키는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

한편 피수용자는 불법감금에 관해 입증할 능력이 미약할 수밖에 없는 점을 고려해 법원에서 보호사건의 처리에 있어서와 같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직접 조사하거나 검찰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법원이 수용해제결정을 했음에도 수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수용해제된 사람에 대해 같은 사유로 재구금하는 경우, 법원의 조사를 방해하는 경우에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구제청구사건의 재판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제청구자 또는 구금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피수용자의 구제청구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것이므로 구제청구를 남용하는 경우에 한해 재판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맞다.

인신보호법 제정은 환영

위와 같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미흡하나마 사적 시설에 수용된 사람들에게 대해 법원에 의한 사후구제방안을 마련한 것은 환영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병원이나 시설 등에 수용된 사람들이 이를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수용시설 안에서 구제청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여러 방안들이 필요하다. 아울러 시설 수용 중심으로 운영되어 온 복지정책과 정신보건 정책은 지역사회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시설에 수용된 수용자 또한 인간이므로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지는 인권의 주체이고 그들의 인권도 보장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 질문을 던지고자 한다. 그들은 10년이고 20년이고 수용시설에 수용되어도 상관없는가? 당신은 그럴 수 있겠는가?



공감 새 식구

2007년, 공감에 새 식구가 두 명이나 생겼습니다. 전직 검사 출신의 장서연 변호사가 2월부터,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던 전은미 간사가 8월부터 공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 공감에 또 한 명의 새 식구가 함께 합니다. 국내 우수로펌에서 활동하던 차혜령 변호사가 3월부터 공감에 뜨거운 열정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 세 여성의 파워가 엄청나서 더욱 생기고 발달한 공감사무실이 되었다는 소문이..... ^^ 얼마 되지 않아 공감에 완전 적응하고 공감을 이끌고 있는 이들의 눈부신 활약을 기대해 봅니다.



황필규 변호사, 1월~8월 영국 파견

황필규 변호사가 2007년 1월부터 8월까지 7개월간 영국 옥스퍼드대학의 COMPAS(the Centre on Migration, Policy and Society)으로 파견근무를 다녀왔습니다. 사무실은 그 동안의 고요함을 떨치고 다시금 활기가 넘치게 되었습니다. 영국에서 고생하며 얻은 많은 보따리를 하나하나 풀어주기를 기대합니다.

정정훈 변호사, 한국사회를 향해 소리치다

숨은 철학자이자, 소문난 글쟁이인 공감의 정정훈 변호사가 한겨레신문 '야한국사회' 라는 고정칼럼을 맡아 쓰게 되었습니다. 깊이있는 글솜씨로 공감 내외로 많은 팬층을 가지고 있던 정정훈 변호사의 글이 이제 널리 알려지게 되어 흐뭇합니다. 또한 시민사회신문에는 공감 변호사들의 글이 2주마다 연재되고 있습니다. 공감이 대중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서 반갑기도 하지만, 그만큼 커지는 책임감에 어깨가 무거워지기도 합니다.



소라미 변호사, 국제적인 로비스트로 활약하다

소라미 변호사가 7월 26일부터 일주일동안 제39차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뉴욕회의에 한국 NGO 대표단으로 참석했습니다. 소라미 변호사는 이번 회의 중 우리나라 국제결혼 중개시스템 등의 문제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한국 정부에 대한 UN권고안에 여성인권을 위한 NGO의 많은 고민들이 담겨져 나와 이후 한국의 여성인권향상에 큰 도움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공감 정기인턴 선발

2007년 3월에는 공감 5기 인턴을, 9월에는 6기 인턴을 선발하였습니다. 9월14일~15일, 공감 6기 인턴 오리엔테이션이 있었습니다. 사상 최대인원 23명의 인턴들이 한 자리에 모여 공감과 인턴활동에 대한 소개를 듣고 친목을 다지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장애인, 여성, 환경, 이주노동자 영역으로 팀을 나누어, 각 주제와 관련하여 우리사회를 들여다보는 팀별 활동에서는 모두들 그 동안 고민해왔던 사회문제를 마음껏 펼쳐내 보이며 개성 있는 작품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공감구성원과의 10분 인터뷰 후 이어진 공감퀴즈대회에서는 공감과 인턴의 활동 관련 퀴즈를 풀며 열기가 더해졌습니다.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며 소통과 배움이 있어 무척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비닐하우스촌 거주민 법률상담, 승소 소식

공감은 2007년 7월 18일부터 '주거권실현을위한주민연합' 과 공동으로 서울에 있는 10여개 비닐하우스촌 중 8개 마을을 선정해 법률상담을 진행했습니다. 법률상담과 아울러 그 지역 주거권 인정을 위한 상징적 의미로 '세대별 문패달기' 와 환경정비 등의 활동을 공감 5기 인턴과 사법연수원생들이 함께 진행했습니다. 비닐하우스촌 거주민 법률상담과 문패달기 활동을 통해 비닐하우스촌 거주민들의 삶을 탐색하고 빈곤계층과의 연대가능성을 찾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문패달기라는 상징적인 작업을 통해 앞으로 비닐하우스 거주민들이 스스로 지역사회를 변화시켜 나갈 조직적인 힘을 키우고, 자신들의 삶을 스스로 창조해 나갈 수 있다는 의식 변화를 만들어가길 기대해 보았습니다. 공감에서는 2007년 비닐하우스촌 주소지전입신고 수리거부처분 취소소송도 진행하여 승소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앞으로는 정책적인 측면에서 주거빈곤층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공감이 감사패를 받았어요~



9월 28일, 공감이 필리핀 카톨릭추기경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공감은 그동안 카톨릭 서울대교구 이주노동자사목위원회 필리핀이주노동자 공동체의 가정폭력 피해여성 상담 및 이혼소송 등을 지원했는데, 그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해주셨습니다. 12월 13일에는 공익제보자와함께하는모임' 에서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의 김영수 변호사에게 그 동안의 '공익제보자 소송에서 무료 변론을 맡아 온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감사패를 주셨습니다. 공감이 이렇게 의미있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것만도 감사한 일인데, 감사패까지 주시니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더욱 감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뛰겠습니다.

언론을
통해 보는
공감

공감(共感)이 있어 대한민국이 행복하다

따뜻한 햇살이 가득한 봄날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을 서울 종로구 가회동에서 만났다. 낮은 곳에 임하는 용기로 소외된 희망을 되살린다는 이들 6인의 변호사는 참 좋은 웃음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은 국내 최초로 비영리로 운영되는 공익활동을 본업으로 삼은 변호사들의 모임(non-profit public interest lawyer' group)이다. 현재 6명의 변호사와 2명의 간사가 상근으로 활동하고 있다. '공감'이라는 이름은 정정훈 변호사에 의해 지어졌다. 사회적 약자, 소수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들과 함께 공감(共感)을 하자는 의미이다. 더 나아가서 일반 대중과 법조계도 함께 공감하고자 하는 바람을 담았다.

'공감'의 활동영역은 다양하다. 특히 인권문제 중 가장 열악한 분야인 이주노동자들의 인권, 여성문제,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장애인 문제, 노인이나 아동처럼 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외부에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내부 고발자, 에이즈나 성소수자의 문제 등 다양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또한 이와 관련된 공익단체 법률지원, 단체활동가 법률교육 및 법률매뉴얼, 공익소송, 공익법 관련 제도개선, 공익활동 프로그램 개발 등을 하고 있다.

이쯤 소개하면, 사람들은 흔히 인권변호사를 떠올리게 된다. 하지만 '공감'은 대한민국 최초 공익변호사라는 수식어답게 인권변호사와는 차별화된다. 첫째, 기존의 인권변호사들이 관심 갖지 못했던 이슈를 다루고 있다. 인권변호사들이 사회적으로 거대 담론에 대한 이야기를 해 왔다면, '공감'은 공익적인 차원에서, 인권문제를 다루고 있다. 또한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에 관한 이슈들을 현장에서 다루고 있다. 둘째, '공감'은 소송차원을 넘어 제도적인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한다는 점이 다르다. 즉, 단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권익을 위해, 제도적 개선이라는 방법으로 본질적인 문제 해결을 추구한다.

'공감'의 변호사들이 이러한 '법률나눔'에 뛰어든 계기는 무엇일까? 인생의 탄탄대로를 뒤로 하고 이들이 업계 최저임금이라는 어려운 길을 선택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영형국 변호사가 처음 '공감'을 만들고 공채로 변호사를 모집하면서 외친 한마디였다.

“낮은 곳에 임하는 용기로 소외된 희망을 되살린다.”



이 말이 큰 공감을 불러일으킨 것일까. 이 말에 감동한 많은 변호사들이 '공감'을 찾았고, 소라미 변호사도 이 중 한 사람이었다. “그래, 저런 걸 하려고 법대에 간 게 아닌가.” 그렇게 시작된 이들의 도전은 현재 소외된 이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

'공감'은 사회의 약자와 함께 현장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이다. 추운 겨울 일인시위도 마다하지 않는 사람들, 내가 공감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다. 일부에서는 '공감'은 법조인인가, 인권활동가인가에 대한 정체성 문제를 묻기도 한다. 이에 대해 '공감'은 스스로를 '법률활동가'라고 말한다. 물론 변호사가 직접 일인시위를 하는 것은 법정에서 싸우는 것보다 비효율적인 지도 모른다. 하지만, 내가 공감하기 때문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목소리 내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것이다.



'공감'을 만든 영형국 변호사는 “우리들도 특별한 인권적인감수성이 있어서 이 일을 시작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한다. 사법시험 준비를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인권변호사를 꿈꾸지만 막상 연수원을 마치고 나면, 환경에 따라 생각이 변하는 것이 현실임을 그도 알고 있다. 하지만, '공감'을 통해 공익활동에 대한 이러한 생각이 바뀌고 있다는 법조인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이 '공감'의 우리 사회에는 큰 희망과 빛이 된다고 믿는다.

“공익활동은 크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일을 하면서도 짬을 내서 활동할 수도 있고, 복지단체나 '공감'과 같은 단체를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공감'의 모든 활동은 수익과는 무관하다. 다른 변호사의 사무실이나 로펌(종합법률회사) 같은 경우에는 수익으로 경영이 되지만, '공감'의 공익활동에 대한 비용은 공익변호사기금 모금을 통해 진행된다. 따라서 '공감'을 꾸준하게 알려나가는 일과 기금 모금 또한 이들의 몫이다.

'공감'의 변호사들은 지난해 10월 미국의 법률공익단체들을 탐방할 기회가 있었다. 그곳에는 다양한 형태의 공익활동 단체들이 있었다. '공감'과 비슷한 많은 단체들을 비롯, 로펌에 근무하면서 틈틈이 공익활동을 하는 변호사, 공익활동과 변호사를 중계해 주는 단체. 또한 아동이나 노인 인권, 이주문제 등 각 이슈를 전문으로 하는 특화된 단체 등 공익법률활동이 다양하게 활성화 되어 있는 미국을 보면서 부러움을 감출 수 없었다. 물론 '공감'에게는 비영리, 전업 변호사 그룹으로서 지금의 모습을 꾸준히 유지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이다. 그리고 나아가 어떤 형태로든 앞으로 제2, 제3의 '공감'이 나오길 바라고 있다..

'공감'에게 나눔은 어떤 의미일까? 그들은 법조인답게 '법률나눔' 큰 의미를 둔다. 그리고 그들 스스로 전문직이라 예고 할 수 있는 의사, 변호사, 회계사와 같은 이들이 지금까지 나눔이라는 것에 좀 인식하지 않았나하는 물음표를 던진다. 우리나라가 아직 미국에 비해 기부문화가 활성화 되지 못했다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렇게 함께 나누는 일이 '돈 뺏기고, 시간 뺏기는 일'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인생을 풍족하게 만들어 가는 일임을 몸소 체험하고 있으며, 우리 사회도 서서히 깨달아 가기를 희망한다.

'공감'의 활동에 공감하고 기부를 원한다면 홈페이지(www.kpil.org)에서 '나눔후원신청' 클릭하거나 하나은행(162-910001-07637, 예금주/아름다운재단)으로 입금하면 된다.

위 왼쪽부터 장서연, 소라미, 김영수 변호사, 아래 왼쪽부터 영형국, 정정훈 변호사

[2007 언론에 비친 공감]

일시	매체	제목	기자
1월 3일	서울신문	인권변호사는 '변신중'	홍희경
1월 4일	한겨레	[이사람] 법적 권위보단 소수자 권리 우선해야	이유진
2월 5일	RTV	나는 장애인이다	
2월 12일	헤럴드경제	내국인 규정 준해 보상... 선례 없어 논란 소지	박세영
2월 13일	여성주의저널 일다	다른 직종에서 일했다고 감금하나?	윤정은
2월 14일	세계일보	공익법률 서비스도 맞춤형으로	김태훈
2월 15일	서울신문	['인권 사각' 在韓 외국인] 잇단 사고 원인·대책	이재훈
2월 21일	울산MBC	국제결혼중개업	
2월 21일	청주CBS	희망변론프로젝트	
2월 21일	리걸타임즈	"법률지원 신청하세요"	
2월 21일	CBS	잘나가던 젊은 女검사가 공익 변호사 된 까닭	김정훈
3월 7일	참세상	"의혹투성이 경찰수사, 통합하지 말라"	변정필
3월 8일	세계일보	"공익활동은 변호사업계 블루오션"	강구열
3월 14일	KBS	반정부시위는 안돼 집시법 위반 논란	
3월 14일	프레시안	'집회 금지' 논란, 법원 소송전으로 비화 집시법 헌법소원 제기 ... '헌법상 기본권 침해'	김하영
3월 14일	KBS	좋은나라 운동본부	
3월 15일	KBS	내일은 푸른하늘 [일요진단] '장애인복지법 개정' 출연	
3월 19일	에너지재단	공감이 있어 대한민국이 행복하다	
3월 26일	MBC	주민소송제도, 예산낭비 '꼼짜마'	노경진
3월 30일	에이블뉴스	장애인생활시설 미래는 어떨까?	소장섭
4월 4일	인권 3*4월호	인권위의 AIDS 권고에 대한 오해와 편견	
4월 10일	문화일보	로펌, 공익활동 강화... 서민과 거리 좁히기	정혜승
4월 11일	중앙일보	공익활동 나선 로펌들... 소년소녀가장 돕고, 미혼모 무료 상담	민동기
4월 20일	프레시안	우리가 정말 두려워 해야 할 것은? [에이즈, 이제 편견 깨자] 외국인 감염자는 무조건 내쫓는 한국 정부 - 정정훈변호사 기고	
4월 20일	에이블뉴스	공감, 공익단체 실무자 법률교육 실시	주원희
4월 26일	연합뉴스, 한겨레, 한국	[사람들] 검사에서 공익변호사로 변신한 장서연씨	김병규 외
5월 1일	여성주의저널 일다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합법화만이 대안"	부갱
5월 10일	시민사회신문	"공익변호사는 무엇으로 사는가"	이재환
5월 10일	시민사회신문	"개인 결단 아닌 사회적 흐름으로"	이재환
5월 18일	법률저널	인터뷰 - 검사서 공익변호사로 변신한 장서연씨	
5월 20일	법률신문	어느 검사의 아름다운 변신 - 1년만에 공직 접은 '공감' 의 장서연 변호사	김재홍
5월 21일	세계일보	공감, '이주노동자 지원 위한 법률매뉴얼' 발간	

일시	매체	제목	기자
5월 23일	한겨레	[야한국사회] '관계'를 위해 망치를 - 정정훈변호사 기고	
6월 7일	내일신문	인턴모집에도 지원 열기 뜨거워 / 대형로펌도 공익활동 건설링 의뢰	김세라
6월 11일	KBS	시사투나잇 - 정신보건법	
6월 14일	한겨레	총성맹세의 강요는 '조폭' 논리 - 정정훈변호사 기고	
6월 27일	내일신문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 연수생 보호의무"	전예현
6월 27일	한겨레	"한국음식 강요당한 이주노동자에 배상하라"	하어영
7월 1일	메디컬투데이	시민사회단체 '의료급여제도 헌법소원 제기'	석유선
7월 3일	KBS전주	시설장애인 성폭력	
7월 4일	한겨레	[야한국사회] '세 번의 자유'에 대한 조소 - 정정훈변호사 기고	
7월 5일	머니투데이, 중앙, 리걸타임즈	법무법인 태평양·아름다운재단 공감, 공익 법무활동 파트너십 체결	김진원 외
7월 6일	한겨레	꽃가마 타고온 한국판서 "난 싸비이로 이용 당했다"	김남일
7월 13일	여성주의저널 일다	군가산정제는 위헌, 군복무 보상방안 마련해야	조이여울
7월 17일	뉴스메이커	[커버스토리]우린, 왜 도대체 난민 인정이 안됩니까?	정용인
7월 25일	한겨레	[야한국사회] 법은 인권의 무덤인가? - 정정훈변호사 기고	
7월 25일	서울신문	[Seoul Law] 공익변호사 그룹 '공감' '최저연봉 자랑스러워'	유지혜
8월 3일	내일신문	연중기획-마음으로 건네는 따뜻한 법률구조 ⑨공익법 운동 통해 사회 변화 추구	김은광
8월 6일	한라일보	국제결혼비용지원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위영석
8월 6일	참세상	고용허가제 3년, 이주노동자 "노동비자"를 외치다	하주영
8월 7일	제주일보	"제주지역 국제이혼율 전국 최고"	
8월 10일	내일신문	연중기획-마음으로 건네는 따뜻한 법률구조 ⑩ 미국 로펌 '프로보노'로 사회봉사 경쟁	김은광
8월 13일	시민사회신문	"여성비정규직 탄압 지적 소름" CEDAW 한국 NGO대표단 소라미 변호사	전상희
8월 15일	한겨레	[야한국사회] 천하장사 마돈나, 그 이후 - 정정훈변호사 기고	
8월 17일	한겨레21	"판사가 무... 무서웠어요."	최은주
8월 23일	부천타임즈	부천시민연합, '주민소환제' 시민강좌 개최 김영수 변호사 "직접참여제도 의의와 추진방안" 강연	나정숙
9월 3일	연합뉴스	청소년 인권 - 학원교습 제한	
9월 4일	연합뉴스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청소년 학원 심야학습 시간규제는 기본권 보장	
9월 5일	한겨레	[야한국사회] '사법살인'의 역사를 교육하자 - 정정훈변호사 기고	
9월 6일	경향신문	청소년 인권차원 학원교습 제한을 - 김영수변호사 기고	
9월 10일	뉴시스	광주여성성전화, 국제결혼 비용지원 문제 토론회	맹대환
9월 11일	여성주의저널 일다	"처벌조항 빠진 국제결혼중개법 유명무실"	부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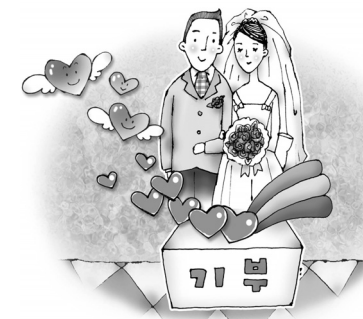


일시	매체	제목	기자
9월 12일	강원일보	[클릭 여성계] 한국알기 사업 설명회	
9월 22일	프레시안	"7개월 전 여수 참사, 벌써 잊었나" [대선에 묻힌 인권법안①]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안 - 정정훈변호사 기고	
9월 26일	한겨레	[야한국사회] 간통죄, 법의 과잉과 윤리의 빈곤 - 정정훈변호사 기고	
9월 27일	한국경제	미안마 군사정부, 승려 100여명 체포... "무력진압 즉각 중단" 촉구	뉴스팀
10월 11일	시민사회신문	비닐하우스촌의 주거권 - 김영수변호사 기고	
10월 15일	연합뉴스	성범죄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여성들	전성훈
10월 17일	한겨레	[야한국사회] '전태일' 이 '조영래' 가 되는 로스쿨 - 정정훈변호사 기고	
10월 18일	한겨레	이주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요구' 봇물 예고	황보연
10월 19일	연합뉴스	이주자 자원활동 위한 권역별 법률교육	강건택
10월 18일	부천포커스	불법체류자 지원, 상위법 위반 아니다	김영의
10월 29일	여성주의저널 일다	차별금지법논란	김영선
10월 29일	시민사회신문	잘못 핀 '다문화주의' - 소라미변호사 기고	
11월 1일	여성주의저널 일다	"차별금지 항목 대폭 줄인 차별금지법 논란 - 학력, 성적지향, 출신국, 가족형태 등 제외돼"	김영선
11월 7일	한겨레	[야한국사회] 차별금지법(안)의 죽음 - 정정훈변호사 기고	
11월 8일	시민사회신문	로스쿨에 대처하는 NGO의 자세 - 염형국변호사 기고	
11월 9일	한겨레21	차별금지법이 사람 차별하네	신윤동욱
11월 14일	보도자료	외환은행 나눔재단 이주자 변론' 기부	
11월 20일	여성주의저널 일다	"특정 항목만 제외할 합리적 기준없다"	조승미
11월 21일	CBS	이주 여성과 그 자녀들, 음지에서 양지로	조기호
11월 22일	시민사회신문	불법체류자라는 말부터 버리자 - 정정훈변호사 기고	
11월 28일	한겨레	[야한국사회] 미등록 이주자의 '빵과 장미' - 정정훈변호사 기고	
11월 30일	참세상	"검진·치료 대상은 감염인? 아니 국회"	김삼권
12월 3일	한겨레	"이주노동자 일회용 취급 안돼"	황예랑
12월 3일	파이낸셜	인권위, 5일 이주노동자 단속 인권보호 토론회	홍석희
12월 9일	프레시안	당신은 10년씩 수용시설에 갇혀 지낼 수 있는가? - 염형국변호사 기고	
12월 10일	뉴스시스	"차별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천금주
12월 10일	매일경제	'차별금지법안' 실질적 구제수단 없다	신재우
12월 10일	시민사회신문	어느 해외 한국기업 이야기 - 황필규변호사 기고	
12월 11일	여성주의저널 일다	'무상제' 차별금지법 만든다	김영선
12월 12일	여성주의저널 일다	'영장주의' 도 안 지키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부갱
12월 19일	한겨레	[야한국사회] '기업 사회' 와 삼성 특검 - 정정훈변호사 기고	
12월 24일	시민사회신문	차별 조장 '차별금지법' - 장서연변호사 기고	



첫 보너스 기부 무더운 여름날, "안녕하셨어요?"라며 공감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공감에서 인턴을 했던 보람씨였습니다. 인턴 활동을 하면서도 일을 참 잘해줘서 많은 도움을 줬던 친구였지요. 작년 미국에 있는 로스쿨로 유학을 가게 되어 오랫동안 소식을 듣지 못했는데 반가움을 가득 안고 나타났습니다. 안부를 주고받으며 인사를 나누다 이제 돌아가려 가방을 들던 보람씨는 어색한 표정으로 손에 봉투를 쥐어주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라고 물으니 "별거 아니에요"라며 급하게 사무실을 나서더군요. 봉투 안에는 작은 쪽지와 함께 꽤 큰 돈이 들어있었습니다. "회사 다니면서 받았던 첫 보너스예요. 공감에 기부하려 했는데 갑자기 유학을 가는 바람에 1년이나 늦어졌네요. 얼마 안 되는 돈이라 썩스럽네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라며 토박 토박 예쁜 글씨가 적혀져 있었습니다.

신혼부부의 희망만들기 7월의 무더운 날, 공감 사무실로 앳된 얼굴의 한 커플이 사무실에 오셨 습니다. "저희 얼마 전에 결혼식을 했거든요. 어른들께서 절값을 좀 주셨는데 공감에 기부하려고요"



젊은 부부는 행복하게 살라고 축복해주신 분들과 그 분들의 사랑과 축복을 나누어 더 큰 희망을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아름다운 마음이 꼭 닳은, 아주 예쁜 이 커플이 만들어준 기쁨이 큰 희망의 씨앗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영미씨, 병서씨 고맙습니다. 늘 행복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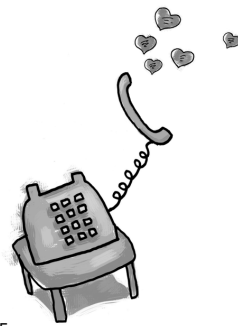
“울산에서 보낸 택배입니다”

택배 기사님의 손에 커다란 박스가 여러 개 들려져 있었습니다. 작년 이맘때 맛있는 자두를 보내주셨던 송준현 기부자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기부자님이 보내주신 소중한 선물이라며 주변분들께 나눠드리며 인심도 쓰고, 인턴들과 함께 과일파티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송준현 기부자님은 또 제철과일을 공감에 보내주셨습니다. 고향에 계신 부모님 마음으로 늘 공감을 생각 해주시는 송준현 기부자님, 감사합니다.



기부자님으로부터 걸려온 반가운 전화

어떤 용건이든 공감 사무실에 직접 전화를 해주시는 기부자님의 목소리를 들으면 가슴부터 설립니다. 애정으로 공감을 지켜봐 주시는 기부자님에 대한 고마움과 먼저 인사드리지 못한 죄송함이 어우러져 기부자님으로부터 전화가 올 때면 공감 식구들은 한 곳으로 귀를 쫓긋 세우고 합니다. 9월 어느 날, 공감사무실을 또 설레게 한 기부자 한 분이 계십니다. 급여가 인상되어 기부금을 조금이나마 높이고 싶다는 말씀을 전화로 통해 해주신 기부자님. 덕분에 공감사무실은 한동안 분위기가 환해졌습니다. 공감을 먼저 생각해 주시는 기부자님의 따뜻한 마음이 공감활동을 통해, 어려운 상황에 놓인 이들에게 전달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더욱 열심히 뛰어아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나눔재단, 이주자를 위한 희망변론에 공감



지난해 외환은행 나눔재단은 이주자들의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드는 데 보탬이 되고 싶다는 공감의 '희망변론 프로젝트'에 5천만원을 기부하여 주셨습니다. 이주자들이 우리사회의 진정한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사회 각 분야에서 노력이 필요한 시기에, 나눔재단의 후원으로 공감은 '이주자를 위한 희망변론프로젝트'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뜻있는 동참에 힘입어 우리사회가 진정한 다문화사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공감이 열심히 뛰겠습니다.



모두들 돈이 중요하니, 명예가 중요하니, 요즘은 이것이 뜨고 있고, 저것은 한물 갔다느니,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이리저러해야하니 떠돌고 있는 와중에, 공감은 그냥 '나는 내 길을 간다' 라고 말하는 듯 딱 버티고 서 있었던 것이다. 무엇보다 나에게 크게 다가온 것은, 공감을 움직이게 하는 힘은 '경쟁'이 아닐 것이라는 점이였다. 또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점을 누가 알아줘야만 (또는 보수로 그만큼의 평가를 해줘야만) 하는 것도 아니었다. 분명 공감은 그 일을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움직일 것이다. 누군가는 반드시 그 일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 이준범 기부자

저는 정말 철없는 22살입니다. '왜 남자친구가 없는거지? 세상의 훈남들은 어디서 뭐하는거야?'라며 한숨쉬는 22살. 수다떠는 게 인생의 낙인 22살. 새벽까지 술 마시고 스타디움하느라 늦는다고 거짓말만 늘어버린 22살. 이래서 시집이나 갈 수 있겠냐는 핀잔이나 듣는 어리버리한 22살. 이런 22살은 단팥빵이라는 책과 용돈의 1% 기부로 돈으로 환산조차 불가능한 정말 값진 공감을 하게되는 공감이라는 단체에게서 늘 배웁니다. 언젠가는 이런 분들처럼 되고 싶다고 희망하면서요, 사회의 믿음이자 희망인 당신들에게서 나는 나의 미래를 꿈꿔니다. 저도 훌륭한 한의사가 되겠습니다. "훌륭하다"라는 말이 가진 속깊은 뜻을 공감에 계신 여러분들과 선생님께 배워서 항상 가슴깊이 새기겠습니다.

- 선혜숙 기부자

많은 사람들이 변호사 그룹이라 으레 돈이 궁하지 않겠거니 생각하는데 순전히 기부금으로 운영되니 모두들 많지 않은 돈을 받고 일하고 있지만 운영이 쉽지 않다는 이야기에 공감에 기부하기로 결심했다. 공감의 뉴스레터를 받으면 꼼꼼히 읽어본다. 공감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지켜보는 것 또한 나눔의 과정이라고 생각해서이다. 모두들 남들보다 능력을 인정받고, 남들보다 승진을 빨리 하고, 남들보다 연봉을 더 받기 위해 앞으로만 달리는 늦은 저녁 시간, 가회동의 불켜진 공감 사무실이 보이면 부자가 된 마음으로 응원한다.



- 권보미 기부자

1월 [공익법 일반]

대법원의 재판지연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 사실 누설로 인한 해고 관련 법률자문(대한에이즈예방협회)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공동행동 개정안 해설서 작업(~2월)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정부 개정안 의견서(국가인권위원회)
 공익제보(재단의 비리, 학교운영자의 여학생 성추행 비리 고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기소유예처분 취소 헌법소원(~8월)
 함께하는 시민행동 예산포럼 및 주민소송 법률지원단 활동(~10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수령으로 인한 예산낭비에 대한 주민감사청구 및 주민소송(~10월)
 국기에 대한 경례 거부 교사에 대한 징직처분 취소 소송(~11월)
 지방의회 의장, 부의장 업무추진비 남용 및 지방의회 의원 관광성 해외여행에 대한 주민소송 및 항소(~12월)
 지방자치단체장, 부단체장 업무추진비 남용 및 위법한 인공폭포 조성사업으로 인한
 예산낭비에 대한 주민소송(~12월)
 지방자치단체 음식물쓰레기처리장 설치예산 낭비에 대한 주민소송(~12월)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 남용에 대한 주민소송(~12월)
 문화관광부의 예술인회관 건립사업 전면 재검토 촉구 기자회견 및 공동대책위원회 의견서

[빈곤과 복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법률자문 - 아동학대, 친권제한 등(~12월)
 대한변호사협회 노인법률지원위원회 회의(~12월)
 정신요양시설 방문조사 보고서
 아름다운재단 희망가게 창업 교육
 경기도 노인학대예방센터 법률자문

[여성]

평택 새움터 성매매피해여성 채무부존재,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지원(~4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토론회(여성가족부)
 이주여성 관련 전화 법률상담 (제주, 부천이주노동자복지센터, 푸른시민연대)
 가정폭력 피해 중국 여성 가사소송지원 진행(인천여성의 전화)
 쏘냐의 집 성매매피해여성,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법률자문 및 중개
 여성차별철폐협약 선택의정서 발표에 따른 이행방안 모색 토론회 참석(UN여성차별철폐위원회, 민변 여성위원회)
 이주여성 인권포럼(~12월)
 연예유홍비자를 통한 이주여성 유입 시스템 실태조사 및 보고서(문화관광부)(~3월)
 시설운영자에 의한 입소 정신지체장애 여성에 대한 성폭력 사건 손해배상 소송지원(~6월)
 성폭력피해자 형사소송 진행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어느 곳에 기부를 할지 찾아보던 중 '공익변호사기금'을 알게 되었다. 그때까지 나의 개인적인 경험으로 보았을 때,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 가장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수단은 법이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공익을 위해 일하는 단체가 있다고 하니, 나는 후원을 위해 망설임 이유가 없었다. 처음부터 꾸준히 그리고 정기적으로 기부를 할 생각은 없었다. 그냥 생각날 때만 기부를 하던 중에, 여기저기서 가끔씩 '공감'의 활동소식들을 접하게 되었다. 그때마다 나의 가슴 속에서 조금씩 '기쁨'과 '뿌듯함'이 꽃처럼 활짝 피어나기 시작했으며, 이런 감정적인 경험들은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살아가는 내게는 그 무엇보다도 좋은 활력소가 되었다.

- 김동울 기부자



많은 법학도들이 사법고시를 준비하면서 사회적 약자와 어려운 이웃을 위해 법조인이 되어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법조인의 길에 입문한다. 그렇지만 대부분은 그 처음 마음을 상실한 채 속한 그룹에서 패배감에 살거나 우울 주위에 빠져 그 처음 마음을 잃어간다. 그렇기에 이런 말들은 합격수기이나 쓰는 말이 된 듯하다. 그러나 공감의 변호사들은 진정 주위에 돈 없고, 뺨 없고, 약한 이웃을 위해 기꺼이 자신들이 가진 능력을 사용하며 살아가고 있다. 그분들의 너무나 밝게 웃는 모습과 아직 할 일이 많으며 늦은 시각 공감 건물로 향해 뒤돌아서는 모습은 앞으로의 나의 법조 생활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듯하다. 대화 중 인턴학생의 말이 가슴에 남는다. '공감에서 일을 하면 딱딱한 마음이 몽글몽글해 지는 듯한 느낌이에요.'

- 송윤정 기부자



홈페이지 www.kpil.org (CMS 신청이 가능합니다)
 e-mail gonggam@beautifulfund.org
 계좌번호 하나은행 162-910001-07637 예금주 아름다운재단

전화 02-3675-7740
 메일 gonggam@beautifulfund.org
 담당자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권희 간사

2월

[이주와 난민]

산업연수생 퇴직금 청구 소송 진행
중소기업중앙회의 산업연수생 관리 의무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6월)
중국인에 대한 난민불허처분 취소소송(~6월)
버마 NLD 8인 난민불허처분취소소송 진행
버마행동 난민인정불허결정처분취소 항소 및 상고(~12월)

[장애]

장애인 청계천 접근권 차별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소송 및 항소(~12월)
정신장애인 인권보장을 위한 법제연구 최종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
한국 제나가족지원센터 법률자문 - 정신지체 및 발달장애아
KBS 제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매주 화요일 출연)
장애인단체총연맹 상담자문 - 케어복지사에 의한 사고

[공익법 일반]

공익제보자(중국산 가짜참기름 유통 비리 고발)를 위한 손해배상청구 소송(~12월)
지역시민단체 및 공공기관 반부패협약의 추진위원회 설립을 위한
모범조례안 '청렴도시만들기조례' 검토(국가청렴위원회)(~3월)
'성전환자 성별 변경에 관한 성전환자 증인 및 전문가 토론회' 토론회(국가인권위원회)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 법 제정 활동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조 정의규정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12월)

[빈곤과 복지]

사회복지사업법 정부개정안 의견서 작성
노숙인 법률상담(노숙인 인권과 복지를 실천하는 사람들)(~12월)
SBS <SOS긴급출동> 아동학대사례 자문
장애인시설(복지재단) 비리 고발 및 제도개선 요구중 기소된 농성장애인과 인권활동가들을 위한 형사변론(~6월)
장애인시설(복지재단) 비리 고발 및 제도개선을 요구한 장애인공동투쟁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를 대리(~12월)

[여성]

'국제결혼중개 규제 법안 마련을 위한 입법 공청회' 토론회(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
이주여성 관련 법률상담(성동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12월)
사망 배우자의 자(子)가 제기한 혼인무효소송에 대한 중국 여성의 추완항소 지원(인천여성의전화)(~12월)

3월

[이주와 난민]

한국이민학회 국제이주 컨퍼런스
용산 나눔의집 방문 법률상담 - 난민의 가족결합 관련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자문의견서 - 산재인정 직권취소 관련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원영 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 대한 의견서(인권단체연석회의)
경찰의 불법체류자 단속 관련 의견서 (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 화재사건 법률지원 및 공동대책위원회 정책팀 활동(~10월)

[장애]

일본 성년후견 관련기관 방문연수(성년후견추진연대)
근육장애인협회 법률상담 - 보증금 반환 관련
RTV <나는 장애인이다> 인터뷰 - 장애 여성 성폭력 관련

[공익법 일반]

위장납북어민 보상거부처분취소소송 중개(법무법인 총정)
국가유공자 유족 비해당결정취소 행정심판 중개(법무법인 총정)
공익제보자와 함께하는 모임 법률자문 및 소송지원(~12월)

[빈곤과 복지]

내일청소년상담소 상담원 대상 법률교육 - 형사절차상의 소년법리뷰
서울노인학대예방센터 방문 및 상담
사회복지사업법 관련 보건복지부 입법조사관 면담

[여성]

양육권 침해 피해 베트남 여성 소송 지원 진행
성폭력피해자 명예훼손 건 항소심 진행(~12월)
국제결혼중개 피해 이주여성 법률상담 및 소송지원(이주여성의 집 위함)(~12월)
장애여성 공감 법률상담(~12월)
이주노동자사목회 필리핀 공동체 필리핀 이주여성에 대한 법률상담 및 소송지원(~12월)
성매매피해 필리핀 여성 3인의 업주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항소심 지원(필리핀 공동체)(~7월)
광주성매매피해상담소 언니네 법률상담 및 자문(~12월)
다양한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 해소와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연구모임(~12월)



[이주와 난민]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 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법제 개선 운동 및 소송지원(~12월)
 유엔인권이사회(HRC) 참가 - 민변 서면진술서 '한국내의 이주민의 권리' 제출/스위스 제네바
 미등록이주민에 관한 국제협력네트워크(PICUM) & 국제이주민권리(MRI) 워크숍
 '한국의 미등록이주민과 국제인권' 발표/벨기에 브뤼셀
 이주자 지원단체 활동가를 위한 법률교육(안산시청)
 안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법률상담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법률상담 - 보호일시해제 관련
 여수 화재참사 공동대책위원회 기자회견 및 유가족-정부 간담회(여수화재참사 공동대책위원회)

[장애]

성년후견추진연대 성년후견 입법추진 활동(~12월)
 굿잡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법률상담 및 조례자문회의(~12월)
 한국정신지체인 애호협회 방문 상담(~12)
 지적장애인특별법안 정책단 활동(~12월)
 여성장애인연대 십대 학대 사건 정신병원 강제입원 관련 자문의견(~4월)
 지역사회정신보건자원봉사단 법률교육 - 정신보건법의 문제
 공직선거법상 청각장애인 차별조항 헌법소원 공익활동중개(법무법인 충정)
 KBS 3라디오 내일은 푸른하늘 '일요진단' 출연 - 장애인복지법 전면개정

4월

[공익법 일반]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통제방안' 토론회(임종인 의원실)
 제일동포 (지방)참정권 활동가 5인 법률상담
 문화관광부의 예술인회관 건립사업 공동대책위원회 법률자문

[빈곤과 복지]

노숙인복지와인권을실천하는사람들 '파산학교' 법률교육(~7월)
 경기북구아동보호전문기관 법률자문

[여성]

성매매피해 중국 여성 가사소송 항소심 및 상고심 서면대리(이주여성의 집 위홈)(~7월)
 여성차별철폐협약 반박보고서 작성(민변 여성위원회)(~7월)
 가정폭력 상담원 대상 이주여성 관련 법률교육(한국가정법률상담소 중구센터)
 결혼이주여성 이혼소송 지원(~7월)

[이주와 난민]

민변 국제연대위 인종차별철폐협약 정부보고서 대응 연대 모임 및 반박보고서 작성(~5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원영 안, 법무부 안) 검토보고서에 대한 의견서
 미등록이주노동자 합법화 토론회(민주노총)
 '여수 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 공동대책위 평가와 과제' 및
 '미등록이주노동자 합법화 토론회' 토론(여수화재참사 공동대책위원회)
 여수화재 사건 국가인권위 직권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서 (여수화재참사 공동대책위원회)
 법무부 난민지침에 대한 정보공개불허처분 취소소송(~8월)

[장애]

'성년후견 일본연수 보고회' 토론(성년후견추진연대)
 '성년후견제 도입방안' 토론(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차별금지법시행령·시행규칙 가이드라인 작업(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10월)
 '장애인 거주시설 서비스 혁신방안 공청회' 토론(성공회대 사회복지연구소)
 KBS 3라디오 장애인의 날 기념 특별좌담 - 장애인차별금지법
 HIV 감염인 출국명령취소 소송(~12월)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대응 공동행동 예방법 개정 활동(~12월)
 청각장애 여성 성폭력 피해 사건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장 작성(장애여성 공감)
 정신보건 현황과 개선방안 강의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5월

[공익법 일반]

공감 주최 공익단체 활동가를 위한 법률교육
'예방법 대응 공동행동 법률 간담회' 발제(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공동행동)
'모두를 위한 에이즈 예방, 어떻게 가능한가?' 토론회 발제(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공동행동)

[빈곤과 복지]

비닐하우스촌 주민의 전입신고 수리거부처분 취소소송(주거권실현을 위한 주민연합)(~12월)
대한변호사협회 노인법률지원위원회 활동 -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복지관 협회와의 간담회 및
법률지원 세미나

[여성]

대만의 이주여성 자조조직 그룹 형성에 대한 초청 강연 기획(이주여성인권포럼)
결혼이주여성 소송자료 검토 및 법률자문(새움터)
지자체의 농어민 국제결혼비용지원 사업에 대한 문제제기 공론화(이주여성정책네트워크)
여성가족부 가족정책팀장 미팅 - 다문화가족지원법의 현황 관련
성폭력특별법 8조 항거불능에 대한 판례비평 작성(성폭력상담소)
필리핀, 베트남, 러시아 여성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법률교육(안산시청)

[이주와 난민]

버마 여성 난민인정불허결정처분취소소송(~12월)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사법경찰관의 강제연행에 대한 자문의견(국가인권위원회)
이주노동자 지원단체 법률매뉴얼 발간

[장애]

'한국형 인신보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토론(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 워크숍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강의 - 정신보건 현황과 개선 방안
장애인시설(복지재단) 비리 고발 및 제도개선을 요구한 장애인공동투쟁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고소에 대하여 피고를 대리, 형사변론(~6월)
장애여성 공감 법률세미나 - 장애여성의 재생산권과 낙태



6월

[공익법 일반]

공익제보자(회사내 비리 내부신고)에 대한 회사의 부당처우에 대하여 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및 관련 헌법소원 청구 지원(~12월)
공익제보자(회사내 비리 내부신고)에 대한 무고 등 혐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12월)
국기에 대한 경례 거부 교사에 대한 전교조 재심위원회 제출 의견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주민회의 정보공개 청구 행정심판서 작성

[빈곤과 복지]

아동학대예방 매뉴얼 발간
아동학대 기획 포럼 - 피학대아동에 대한 권리보장 및 친권개입
의왕지역아동센터 법률자문 - 불법행정대집행 관련
노숙인 폭행사건 법률상담(노숙인 다시서기 지원센터)
인권위원회 정신요양시설 방문조사팀 간담회

[여성]

'지자체의 농어민 국제결혼 비용지원 사업,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 기획, 개최(이주여성정책네트워크)
장애여성 활동가 법률세미나 지원(장애여성 공감) - 장애여성 성폭력, 형법 개정안
몽골, 중국, 러시아, 필리핀, 베트남 상담원 대상 법률교육(이주여성 1366)
전국여성농민회총연맹 법률자문(~12월)

[이주와 난민]

국가인권위원회 외국인보호소 실태조사 참여 및 관련 보고서 작성(여수 화재참사 공동대책위원회)(~10월)
경찰의 불법체류자 단속 관련 의견 (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이주정책연구소(COMPAS) '국제법체계에서 이주민의 가족결합권에 대한
기본접근방법의 재구성' 발표 - 영국 옥스퍼드
청주 외국인보호소 터키인 소송지원

[장애]

굿잡장애인자립생활센터 법률교육 - 장애인시민학교 '자립생활조례제정의 필요성 및 실천전략'
장애인차별금지법 해설서 사법행정 부분 작성(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원주장애인복지관 법률교육 -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가족 지원조례 제정 작업(김해장애인부모회)



7월

[공익법 일반]

의료급여법시행령 본인부담금 부과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및 기자회견
 공익제보자(KTX 사업 과정에서의 예산낭비 국가청렴위 신고)에 대한
 정보통신망법 적용 사건에 대한 민사사건 대리(~12월)
 37기 사법연수생 전문기관 연수 '민변 사법위 활동 소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법무법인 태평양 협약식 및 공익활동중개
 '건설현장의 노-노 갈등 간담회' 발제(대구성서공단노조)
 오가야마 퍼블리크 변호사단 공감 방문

[빈곤과 복지]

강남·서초·송파구 소재 비닐하우스촌에 대한 실태조사 및 법률상담
 (주거권실행을위한비닐하우스주민연합 공동) (~8월)
 노숙인 폭력피해 실태조사(다시서기상담보호센터 공동) (~8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상담원 대상 교육 - 아동학대 사례개입을 위한 법률문제
 노인법률지원 지침서 제작
 동성애자인권연대 법률상담 - 폭행, 아웃팅 관련
 영등포노인종합복지관 법률교육 및 상담 - 노인에 대한 재산적 학대
 스키아SKY아파트 수도요금반환운동 의견서, 안전진단 및 이주대책 검토
 강제퇴거 관련 세입자 이주대책 의견서(인권운동사랑방)

[여성]

필리핀 결혼이주여성 이혼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필리핀 공동체) (~12월)
 필리핀 결혼이주여성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변경 청구 소송(필리핀 공동체) (~12월)
 성매매피해 필리핀여성 3인의 업주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항소심 진행(필리핀 공동체)
 농어민국제결혼비용지원사업 감사청구서 작성(이주여성정책네트워크)
 대리모로 이용당한 베트남 여성의 손해배상청구 및 양육자지정변경신청 소송지원 (~11월)
 UN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제39차 뉴욕회의 NGO 대표단 참석 (~8월)
 충북지역 농어민국제결혼비용지원사업 반대 토론회 토론회

[이주와 난민]

여수화재참사 공동대책위원회 집시법 위반 사건 정식재판청구(이주공동행동) (~12월)
 이주노동자 배포용 단속매뉴얼 작성(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산이주노동센터 법률상담 - 이주자 교통사고 관련
 네팔 난민불허처분취소소송 진행 (~12월)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이주정책연구소(COMPAS) '국제법체계에서 이주민의 가족결합권에 대한
 기본접근방법의 재구성' 발표 및 난민연구소(RSC) 강제이주 여름학교 참가/영국 옥스퍼드
 '유엔 이주권리협약 비준을 위한 시민운동의 과제' 토론회(한국사회포럼)



8월

[장애]

법률상담 연수생 교육(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지적장애특별법안 제정 작업(지적장애인복지협회) (~12월)
 복지TV방송 - 지적장애인특별법
 굿잡 장애인자립지원센터 자문 - 장애인의료사고, 자립지원법령, 장애인연금 등
 국가인권위원회 정신장애인 인권 간담회
 성동구, 강남구 장애인자립지원조례안 지원 (~12월)

[공익법 일반]

순천시 민간인 예비 부당지원에 관한 고발
 강남뉴코아 이랜드 1인 시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이랜드 폭력진압 규탄 기자회견 및 지식인 행동의 날
 제주도 해군기지 주민여론조사 시행 관련 의견서
 한국YMCA 전국연맹 주최 토론회 - '학원교습시간제한과 청소년의 인권' 토론회 (~12월)
 호주 뉴사우스웨일즈대학교 외교연수프로그램(DTP) 인권옹호와 기업 워크숍
 - '슈에가스프로젝트: 새로운 단계' 발표 /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부천시민연합 강의 - 시민강좌 '직접참여제도의 의의와 추진방향'(주민소환제를 중심으로)
 공익제보자(회사내 비리 내부신고)에 대한 해고무효확인소송 (~12월)

[빈곤과 복지]

국가인권위원회 부랑인시설 방문조사 참여 (~11월)

[여성]

필리핀 여성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변경 청구 (~12월)
 여성결혼이민자 관련 활동가 법률교육(결혼이민가족지원연대)/옥천
 토론회 '농어민국제결혼비용지원 조례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참여/제주
 유엔UN 여성차별철폐협약 후속 회의(여성가족부 장관)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이주여성소위원회 회의 참석

[이주와 난민]

국내법원의 난민관련 판례 동향 작성(UNHCR 난민변호사 네트워크)
 출입국 단속 보호 등 인권친화적 제도 개선 연구(법무부 용역) TFT 및 보고서 작성
 (대한변협 이주외국인인권소위) (~12월)



9월

[장애인권]

장애인차별실태 분석 및 유형화에 관한 연구(양극화·민생대책위원회)(~10월)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인권위법개정 관련 의견서

[공익법 일반]

사회운동포럼 해외한국기업 워크숍 토론
필리핀 소재 한국기업의 노동3권탄압 관련, OECD 가이드라인 국내연락사무소에 진정서 제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민원 자문 의견서 - 산재보험금 환수 관련
국가청렴위원회 자문의견(~12월)
부천시 주민감사청구
강남구 주민소송 자문
대구 에이즈예방협회 공무원 양성교육 강의
활동가 법률교육 - NGO와 법의 지배 '공익소송의 실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광주참여자치21 토론회 '주민소환제의 의미'

[빈곤과 복지]

국가청소년위원회 자문회의(~12월)
YMCA 청소년인권을 위한 학원교습시간제한 토론회

[여성]

지자체 농어민 국제결혼 비용지원 사업 관련 토론회 발제(광주여성의전화)
국제결혼 정보제공사업 - 베트남 현지 공무원 및 상담원 대상 한국 법률 강연(유엔인권정책센터)
싱가폴 버마 출신 'Health Care Worker' 연구자 초청 강연(이주여성인권포럼)
언니네 법률자문 - 선불금 무효, 항소권회복청구서 등(~10월)
결혼이주여성의 인권실태 및 법적 쟁점 강연(이화여대 한국근현대사연구회)

[이주와 난민]

피보호외국인 캄보디아인 항소권회복청구 진행
다함께 동부포럼 '우리는 왜 이주노동자를 환영하여야 하는가' 발표
여수보호소사망사건 집회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적용 사건 형사변론
고용허가제의 사업장 변경 3회 제한에 대한 헌법소원(~12월)
불법체포단속 피해자 면담 및 손해배상소송 진행

10월

[장애]

정신장애인 인권개선활동 '정신장애인 인권현황과 개선방안' 토론(법과사회이론학회)
광주 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 자문의견
장애인차별 기존 법률 검토보고서 워크숍 참여
여성장애인 성폭력 상담원 양성 법률교육(서울여성장애인연합)

[공익법 일반]

한국기업 버마 무기수출 판결선고 기자회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국제연대위원회 '국제인권법 특강' (~11월)
'학원교습시간제한과 청소년의 인권' 토론회(한국YMCA전국연맹)
세계한인변호사회(IAKL) 총회 - '한국로펌의 공익활동' 발표
학교용지부담금 관련 감사원 감사 신청(~12월)
군대 내 동성애자 병사 인권침해 대응 대책위 의견서
선원법상의 에이즈 검진규정에 관한 자문 및 의견서(국가인권위원회)(~11월)
필리핀 소재 한국기업 노동3권탄압 관련, 필리핀 현지 조사
대한에이즈예방협회 감염인 활동가 법률교육

[빈곤과 복지]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두발자유화 관련 자문의견 및 헌법소원 검토 의견(광주참교육학부모회)
국가인권위원회 2007 안양소년원, 광주소년원 방문조사 참여 및 관련 보고서 작성

[여성]

국제이주기구 주관 베트남지역 국제결혼 현지정보제공사업 법률강의
결혼이주여성의 인권실태 및 법적 쟁점 강연(사법연수원 제38기 법여성학회, 인권법학회)
국제결혼 이주여성 법률자문(인천여성의전화)
가정폭력 상담원 대상 이주여성 관련 법률교육(한국가정법률상담소 중구센터)
이주여성 관련 법률강의(여성가족재단)





[이주와 난민]

국가인권위원회 보호소 이송 자문의견서 제출
버마 민주화 긴급행동 기자회견 참여
공감 주최 이주자 지원활동을 위한 권역별 법률교육/대전, 광주, 대구, 서울(~11월)
사촌간 혼인 파키스탄 남성 비자 발급건 자문의견서(국가인권위 이주정책팀)
법무부 인권국 직원 대상 출입국 관련 직무교육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난민 특강

[장애]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공청회 및 보건복지부 면담
성폭력 전담검사 교육 - 장애여성에 대한 성폭력(법무연수원/검찰청)(~11월)
장애여성공감 법률 세미나 - 장애인복지법(~11월)
장애인시설 방문조사 회의(국가인권위원회)
정신장애 및 장애인차별금지법 연석회의

[공익법일반]

광진주민연대 법률자문 -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상 하자 관련
행의정감시를 위한 전남연대 법률자문 - 광주터미널 백화점 입점 관련
지방의회 의장, 부의장 업무추진비 남용 및 지방의회 의원 관광성 해외여행에 대한 주민소송 항소(~12월)
차별금지법 관련 인권단체 기자회견 및 간담회, 대응기구 구성 준비 및 법안 검토(~12월)
한미FTA 대전충남운동본부 집시법 위반 형사변론 자문
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인 인권위 의견서 및 예방법 관련 기자회견
한국기업의 버마 가스 개발 사업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진정(하버드 대학교 인권클리닉 공동)
성소수자 긴급행동 활동(~12월)
기독교변호사회 강연 '공감의 공익활동'

[빈곤과 복지]

울산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사례 상담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공익활동 중개 (법무법인 충정)
차별금지법 제정 저지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
전국 노인복지관 상담원 법률교육 - 노인학대의 형사문제(대한변호사협회)
고양시 노점상 단속 관련 의견서 작성 (전국노점상연합회)
송파노인복지관 법률교육 - 유산, 상속에 관한 법률문제

[여성]

한국여성연구원 30주년 심포지엄 발표 - 국제결혼이주여성 인권실태 및 법적 쟁점
필리핀 여성 정신장애 불고지 남편 상대 이혼소송(~12월)
'이주여성의 현황 및 법적 지위에 관한 세미나' 발제(서울지방변호사회)
서울대학교 여성연구소 국제결혼이주여성 국제컨퍼런스 발제 - 결혼이주여성의 인권실태 및 관련 법적 쟁점
여성학회 추계학술대회 차별금지법 토론회 발표(이화여대 여성학과 긴급모임)

[이주와 난민]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업주의 폭행 및 경찰공무원의 강제연행 손해배상소송(~12월)
한국기업 버마 무기수출 판결선고 기자회견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원영안, 법무부안) 검토보고서에 대한 의견서(인권단체연석회의)
'한국내 난민의 보호' 발표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인권소위)
아시아의 친구들 법률자문 - 근무처 변경 관련
이주노조 국제노동기구(ILO) 진정 자문

[장애]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법률교육 - 장애우대학 열린강좌 '지적장애인특별법 제정 방향'
국가인권위원회 정신보건법상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에 관한 권고안 작성
장애인단체 푸른 아우성 법률자문 - 고용장려금 부정사용 건
장애우권익문제대선연대 정책과제 정리 -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 '성동구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의 법률적 검토' 토론문 발표(성동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12월

[공익법일반]

2007한국인권보고대회 '사법개혁 현황과 과제' 발제 (인권단체연석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차별금지법의 올바른 제정과 반차별공동행동 구성을 위한 토론회' 발제(반차별공동행동)
'로스쿨 간담회' 발제(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로스쿨 발전방향' 토론(연세대학교)
천주교 주교회의 정평위 세미나 '사형, 그 유예를 넘어' 발표
유엔인권정책센터 주최 유엔인권체제 워크숍 '유엔조약기구 권고' 발표
유엔 보편적 정례검토 워크숍 '유엔인권기구의 한국에 대한 권고' 발표
국가청렴위원회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자문의견
국가인권위 유럽사회현장 세미나 패널 토론
방송통신대학교 인권법 교재 발간

11월

지구지역 시대 지식생산과 여성연구의 도전
Knowledge Production and Challenges of Feminisms in the Global World



이 문제인가
공공의 이익과 개인의 자유



한눈에 보는 공감 살림



[빈곤과 복지]

‘올바른 에이즈예방법 제정’을 위한 기자회견(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공동행동)
 ‘학원 및 교습소 시간 연장과 청소년심야학습에 대한 토론회’ 토론회 참석 (대전YMCA)
 성폭력가해자 교육프로그램 ‘청소년 인권과 성폭력 관련 법률’ 강의 (내일청소년상담소)

[여성]

2007 한국인권보고대회 ‘국제결혼이주여성 인권실태’ 발표
 (인권단체연석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헌법의 여성관련 조항 개정 연구 보고서 검토회의
 제주 현장상담센터 ‘해냄’ 법률자문 - 유흥업소 여성 관련
 한국가족법학회 동계학술대회 ‘베트남의 가족법 및 국제결혼 관련 법제에 대하여’ 토론회 참석

[이주와 난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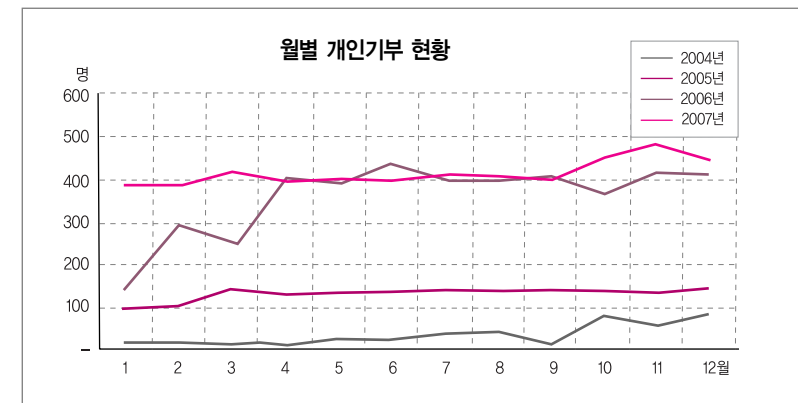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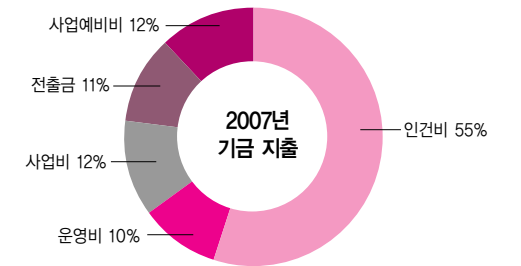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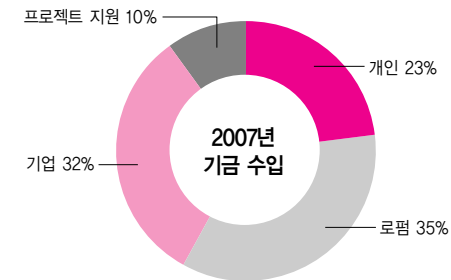
2007한국인권보고대회 ‘한국의 이주민과 국제인권 및 이주분야 총괄 발표’
 (인권단체연석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단속과정에서의 미등록외국인 인권보호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출입국관리와 경찰’ 발표
 (국가인권위원회)
 이주노동자 제주도 표적단속 관련 지원(이주공동행동)
 출입국관리법 개악 시도 규탄 및 저지를 위한 기자회견(이주공동행동)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 법률자문 - 국적판정 부작위 행정심판서 검토
 이주노동자 농성장 ‘단속’ 관련 교육

[장애]

국가인권위원회 상담센터 직원 법률교육 - 정신보건법의 제문제

2007년 공익변호사기금 현황

수 입		지 출	
개인	144,843,105	인건비	215,863,505
로펌	218,000,000	운영비	41,821,450
기업	200,000,000	사업비	48,899,645
프로젝트 지원	59,750,000	전출금	46,132,856
기타(법률학교교재비 등)	560,000	사업예비비	50,000,000
수입 총계	623,153,105	지출 총계	402,717,456



나눔으로 함께 해주시는 기부자님 고맙습니다. 나눔으로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을 함께 이끄시는 분들입니다.

“ 김민태, 감성욱, 강금실, 강기탁, 강대근, 강명수, 강문혁, 강백중, 강성우, 강수진, 강영재, 강재상, 강주리, 강주병, 강철식, 강태영, 강태욱, 강희정, 고경단, 고미라, 고민정, 고상태, 고준영, 고현웅, 곽기태, 곽노현, 곽명진, 곽분이, 곽홍선, 광주염주동성당, 구길모, 구민경, 구인호, 구지인, 권기현, 권두섭, 권보미, 권순연, 권순조, 권양희, 권오건, 권오근, 권오성, 권오직, 권오태, 권용선, 권용숙, 권익환, 권정순, 권주호, 권준을, 권택근, 권희, 기지서, 길용수, 김경모, 김경미, 김경연, 김경열, 김경환, 김경원, 김경임, 김경주, 김계순, 김규환, 김근식, 김기형, 김나나, 김남진, 김남훈, 김대식, 김대일, 김대호, 김대훈, 김도균, 김동진, 김동식, 김동욱, 김명성, 김명수, 김명희, 김미경, 김미라, 김미윤, 김미진, 김민경, 김민재, 김민지, 김민희, 김범준, 김범진, 김병구, 김병기, 김병주, 김병철, 김병필, 김보경 김복기 김삼미, 김상민, 김상순, 김상준, 김상호, 김상희, 김서현, 김석곤, 김선실, 김성준, 김성훈, 김세명, 김세영, 김세진, 김소영, 김수경, 김수민, 김수연, 김수철, 김수정, 김수철, 김수홍, 김승범, 김연수, 김연숙, 김영도, 김영란, 김영림, 김영만, 김영모, 김영민, 김영옥, 김영익, 김영주, 김영훈, 김용일 김용학, 김용호, 김원일, 김유라, 김유련, 김유진, 김유채, 김유연, 김윤한, 김윤희, 김은권, 김은미, 김은아, 김은엽, 김이승현, 김인배, 김인철, 김재년, 김재욱, 김재원, 김재학, 김재홍, 김정민, 김정선, 김정애, 김정일, 김정환, 김종수, 김종숙, 김종원, 김종철, 김종하, 김종현, 김좌진, 김주미, 김주욱, 김주인, 김주혁, 김주현, 김준기, 김준현, 김지강, 김지향, 김지형, 김지혜, 김진규, 김진수, 김진영, 김진호, 김진희, 김찬성, 김창환, 김창완, 김창현, 김철영, 김춘식, 김태경, 김태욱, 김태준, 김태환, 김평우, 김학렬, 김한석, 김혁, 김현, 김현미, 김현우, 김현익, 김현정, 김현주, 김형로, 김해영, 김해진, 김홍민, 김홍술, 김효권, 김희석, 김희정, 나승철, 나현철, 나희석, 남병관, 남상철, 남선경, 남진숙, 남현, 노나경, 노찬용, 노환철, 단경일, 담도경, 류재욱, 류정명, 류준세, 류철민, 류혜정, 마삼미, 마석우, 마성남, 맹남주, 명종진, 명종훈, 문경민, 문경순, 문경애, 문미란, 문승권, 문승환, 문영선, 문영주, 문주호, 문준호, 문찬승, 문한식, 민경동, 민병룡, 민선영, 민세영, 박기현, 박경선, 박경원, 박경용, 박경철, 박규영, 박금주, 박기리, 박기민, 박기성, 박기철, 박다인, 박대기, 박래형, 박병업, 박상석, 박선희, 박성구, 박성규, 박성룡, 박성민, 박성호, 박세웅, 박세진, 박소연, 박소영, 박수연, 박숙경, 박순관, 박순교, 박순덕, 박순주, 박순관, 박신영, 박연정, 박연정, 박영기, 박영동, 박영록, 박영미, 박영석, 박영선, 박영신, 박영중, 박용대, 박용식, 박용진, 박원순, 박원중, 박윤식, 박은경, 박은미, 박인호, 박재성, 박정교, 박정길, 박정렬, 박정민, 박종국, 박준영, 박지호, 박지훈, 박진호, 박찬우, 박춘희, 박태범, 박태원, 박태주, 박태호, 박현수, 박현철, 박형욱, 박혜선, 박홍우, 박화숙, 박희석, 박희문, 방선영, 방정자, 배귀선, 배영근, 백경미, 백영숙, 백삼미, 백선익, 백수진, 백인욱, 백중근, 백중석, 변윤석, 변지영, 서미향, 서범욱, 서상수, 서선영, 서세인, 서영교, 서주호, 서재만, 서희원, 선미라, 선정호, 선혜숙, 설상수, 설성원, 설창일, 성원제, 성정모, 성창익, 소미호, 손민욱, 손복희, 손유정, 송달룡수목합동, 송대진, 송미영, 송민하, 송상교, 송성득, 송승수, 송승우, 송영복, 송윤정, 송은아, 송인숙, 송인욱, 송인호, 송준현, 송지은, 송충렬, 송치영, 송현순, 신낙균, 신미라, 신민경, 신석범, 신선영, 신승원, 신용원, 신원기, 신윤주, 신윤진, 신은숙, 신창용, 신학희, 신희복, 심정화, 심해용, 심혜진, 안강순, 안민영, 안성식, 안영일, 안영춘, 안인걸, 안재한, 양길용, 양남주, 양래청, 양병, 양보람, 양성욱, 양세련, 양연순, 양은진, 양재선, 양재성, 양필승, 양현모, 양현아, 양화정, 엄미라, 여광수, 여운국, 연수진, 연제현, 염경용, 염규상, 염신연, 염신희, 오동렬, 오명희, 오영수, 오재철, 오정민, 오지연, 오지원, 오현석, 오현주, 오현희, 오형동, 오형석, 옥봉성, 옥경미, 옥성진, 우석우, 우은주, 우종원, 우준현, 원경훈, 원주호, 위은진, 유미희, 유선영, 유수정, 유충현, 유주영, 유지선, 유지연, 유지현, 윤나라, 윤민하, 윤성식, 윤승기, 윤영도, 윤영일, 윤용준, 윤정숙, 윤정원, 윤정훈, 윤찬욱, 윤치환, 윤태권, 윤현진, 윤호석, 윤화영, 이경철, 이경호, 이계수, 이고은, 이광현, 이금화, 이기봉, 이길호, 이대로, 이덕희, 이명선, 이문석, 이미경, 이민우, 이병록, 이보람, 이상률, 이상석, 이상중, 이상현, 이상희, 이석재, 이선, 이선영, 이성희, 이세리, 이세인, 이소일, 이수영, 이수진, 이수희, 이승민, 이승엽, 이승환, 이승희, 이안, 이양열, 이연주, 이연덕, 이연진, 이영주, 이영지, 이영호, 이우진, 이원규, 이원룡, 이윤경, 이윤수, 이은영, 이은숙, 이은정, 이은주, 이의석, 이인석, 이인철, 이일권, 이재철, 이재민, 이재숙, 이재욱, 이재형, 이정남, 이정란, 이정석, 이정설, 이정애, 이정우, 이정인, 이정진, 이정호, 이정화, 이정희, 이종광, 이종근, 이종원, 이종은, 이주열, 이주현, 이준범, 이준채, 이준하, 이자수, 이자연, 이지용, 이지은, 이지혜, 이진우, 이찬호, 이창현, 이채연, 이채진, 이추희, 이치선, 이탄희, 이태상, 이태준, 이태호, 이한주, 이항규, 이혁재, 이현석, 이현주, 이현철, 이형근, 이형수, 이혜욱, 이혜진, 이호, 이호선, 이홍관, 이홍철, 이황희, 이희경, 이훈석, 이희만, 이희숙, 이희형, 임대우, 임대례사, 임동선, 임동은, 임미숙, 임선영, 임선일, 임수아, 임승빈, 임신원, 임원범, 임정숙, 임지은, 임진희, 임창현, 임택희, 임통일, 임혜빈, 임화영, 임홍재, 장경욱, 장경숙, 장삼일, 장성윤, 장세호, 장순선, 장우철, 장원선, 장유식, 장은영, 장인형, 장진호, 장철익, 장판목, 장현석, 장혜선, 전경태, 전기성, 전남경, 전명숙, 전성우, 전수안, 전이람, 전지성, 전진홍, 전현실, 전혜향, 정경애, 정국진, 정남숙, 정다영, 정다훈, 정동수, 정미화, 정민, 정보근, 정석원, 정성연, 정성운, 정수인, 정수현, 정승훈, 정연우, 정영선, 정영현, 정영혜, 정영혜, 정영호, 정영석, 정유석, 정은아, 정익숙, 정자호, 정재욱, 정종교, 정준길, 정준원, 정준호, 정지선, 정진화, 정찬목, 정창권, 정태훈, 정해원, 정호식, 정화영, 제영아, 조강수, 조나란박, 조동은, 조민애, 조범석, 조병규, 조병준, 조상남, 조서연, 조영규, 조영선, 조영중, 조용기, 조용만, 조원석, 조윤상, 조은혜, 조정은, 조정익, 조주영, 조지훈, 조진, 조창래, 조태연, 조현복, 조현빈, 조현숙, 조현진, 조혜련, 조혜정, 조효민, 주두수, 주상진, 주익철, 줄리아바우키, 진민경, 진영호, 진형혜, 차경희, 차영진, 차지훈, 채만기, 채승우, 채주연, 채희선, 채화정, 천봉주, 천승재, 천성배, 천지현, 천하람, 최건섭, 최경락, 최광석, 최근영, 최미복, 최병기, 최병석, 최서운, 최성보, 최세현, 최승, 최영동, 최영성, 최용덕, 최용혁, 최유미, 최영명, 최원석, 최원일, 최유, 최유신, 최은순, 최재광, 최재훈, 최정규, 최정환, 최중순, 최한석, 최현준, 최혜정, 최홍엽, 최희정, 추혜윤, 태지영, 명인규, 표현지, 필립하스, 허상혁, 허성우, 허세미, 허숙자, 허승수, 한경수, 한 대용, 한상복, 한상희, 한선, 한이름, 한연규, 한용, 한인수, 한지현, 한정옥, 한창남, 한호숙, 함영선, 함철성, 허미영, 허승진, 허용하, 현정빈 (Re-1968), 홍명중, 홍성백, 홍세화, 홍수희, 홍영재, 홍은기, 홍은선, 홍종희, 홍주환, 홍지은, 홍진영, 홍희경, 황경모, 황구현, 황성우, 황영명, 황용기, 황익중, 황인규, 황재호, 황정임, 황주동, 황지예, 황현정, 황호연, BenjaminJuhnChristianS,Na, FrederickS.Chung(정석중), 감앤장법률사무소, 대우버스터(주), 동아타이어공업(주), 동원시스템즈, 로앤비, 법무법인 지평, 법무법인충정, 법무법인태평양, 법무법인한누리, 법무법인화우, 법무법신희, 사내변호사모임, 신한은행구조흥은행, 아시아인권문화재단, 애린복지재단, 외환나눔재단, 유독글로벌, 인천장애인유권센터, 천안외국인노동, 충남장애인학부모회,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팽택&큐리텔, 한국유네스코 BNG스틸 ”

후원 안내

아름다운 나눔은 내가 나눌 수 있는 가장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비록 한사람의 나눔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작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마음들이 모이면
 세상을 바꾸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나눔으로 마련되는 '공익변호사기금'은
 우리 사회에서 새롭게 시작되는 공익변호사 활동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사회 인권의 경계 확장과 적극적 사회변화 위한 공익변호사들의 굳은 결심에 힘을 더해 주십시오.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은 아름다운재단의 '공익변호사기금'을 재정 기반으로 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공익변호사기금'은 비영리, 전업으로 공익법 활동을 하는 변호사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기금입니다.

홈페이지 | www.kpil.org (CMS 자동이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메일 | gonggam@beautifulfund.org
 계좌번호 | 하나은행 162-910001-07637 예금주 아름다운재단

아름다운재단은 기부금지정대상단체로 아름다운재단에 보내주시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제24조 및
 소득세법 제34조에 근거하여 연말정산시 비용인정 및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영수증은 연말에 1년 동안의 기부액을 합산하여 12월 초에 일괄 우편으로 보내드리며,
 원하시면 별도로 발행하여 발송해 드릴 수 있습니다. 공익변호사기금 기부자님들께는
 공감이 발행하는 사업보고서와 자료집 등의 출판물과 온라인 뉴스레터를 보내드립니다.
 또한, 공감과 함께하는 소중한 분들로서 공감 홈페이지에 게시됩니다.

전화 | 02-3675-7740
 이메일 | gonggam@beautifulfund.org
 담당자 |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권희 간사



권희

공감과 함께한 지 어느새 1년8개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에 대해 가만히 생각해봅니다....
 이 모두 타인과의 관계에서 오는, 다른 사람과의 차이, 서로 다름에 대한
 배려와 이해의 부족 때문은 아닌지...
 그러나 서로 다른 것에 대한 관심으로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서로 다른 '차이'에 대한 진정한 이해와 배려가 공존하는 그 날까지...

김영수

정리된 2007 연간보고서를 보면서,
 지난 1년간의 업무와 만난 인연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 봅니다.
 공감의 든든한 기부자분들, 자원봉사자분, 단체의 활동가분들,
 그리고 늘 활력을 불어넣어주던 인턴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소라미

편협함, 조급함, 성마름... 끊임없이 나의 한계와 부족함을 직시하도록 하는 '공감'은
 나에게 뼈아픈 성찰과 수확의 공간이다.
 그 인연에 감사하며, 공감도 나도 더불어 2008년에는 한층 깊고 넓어졌으면 좋겠다.

엄형국

아름다운재단 사무실에 처음 왔던 때가 아득한 옛날 같기도 하고, 바로 엇그제 같기도 하다.
 우리네 인생도 그렇지 않을까?
 우리 사회가 더디더라도 한걸음 한걸음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믿는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 일할 수 있어서 좋고, 좋은 일을 할 수 있어서 더없이 행복하다.

장서연

1년 동안 사건 지원을 통해서, 연대 활동을 통해서,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 만남들 속에서 스스로의 편견을 돌아보기도 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잃지 않는 끈기함과 작은 희망에서 많은 것을 배우기도 합니다.
 여전히 제게 가장 설레이는 것은 '사람' 이고 '만남' 인 것 같습니다.

전은미

현재의 삶에 충실할 수 있게, 그래서 후회하지 않을 소중한 날들을 선물해주는 아름다운 곳에서
 더욱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위를 보는 여유를 얻는다. 좋아하는 일을 즐겁게 할 수 있고,
 같은 곳을 함께 바라보며 서로 힘이 되어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감사하다.
 마음이 너무 좋아 누구나 좋아할 수밖에 없는 공감구성원들.
 공감과 사랑에 빠져 헌신적으로 공감을 돌보는 완전소중한 인턴들.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공감을 지탱해주시는 기부자님들.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정정훈

살아온 시간 만큼 어울리는 경험과 언어와 웃음을 갖추었는지...
 구체적인 현실의 결을 따라가며, 평생 즐겁게 공부하며 살고 싶다는 생각.
 나를 '지금 여기'에 있게 한 수 많은 因緣들이 고맙다.

황필규

무언가를 정신없이 쫓는다.
 그런데 내가 바라보는 것이 '사람'이 아니라 '사안'이었음을 깨닫는다.
 적어도 이성적으로는,
 무언가를 열심히 한다. 그런데, 그것이 '활동'이었지 '운동'은 아니었음을 느낀다.
 무엇이 다른지 잘 모르면서도,
 일은 해나갈수록 점점 더 어려워진다. '고민의 정체'와 '법률활동의 빈곤'.
 행복하지만 채워야할 부족함이 많다.
 공감, 그리고 공감을 사랑하는, 공감의 일에 공감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차혜령

에필로그에서 새로운 프롤로그를 씁니다.
 2008년 새 봄부터 공감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할 때의 감사했던 마음을,
 첫 출근의 즐거운 발걸음을,
 공감 구성원들의 따뜻한 환영을,
 그리고 기부자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손길을
 항상 기억하며 활동하겠습니다.



권희

김영수

소라미

엄형국

장서연

전은미

정정훈

황필규

그리고
 2008년 3월

차혜령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2007 연간보고서

발행일 2008년 2월

발행처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서울시 종로구 가회동 173번지 3층
Tel 02-3675-7740 Fax 02-3675-7742
www.kpil.org

기획·편집 전은미

디자인 nina's eye